# Issue Paper

2004. 12.

#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

## 목차


요약

Ⅰ. 문제제기

Ⅱ. 기술창업 현황 및 실태

Ⅲ. 기술창업 애로요인 진단

Ⅳ. 선진국의 기술창업 지원정책

Ⅴ. 정책제언



작성 : 김근영 연구원(3780-8054)
lune@seri.org
이갑수 수석연구원

감수 : 이언오 연구위원(3780-8101)
serileo@seri.org



삼성경제연구소

# 《 Executive Summary 》

과거 고용창출을 주도해 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.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고용확대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그러나 최근 신설법인수가 감소하고 창업사업계획 승인 건수가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창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.

국내의 전반적인 창업활동은 2000년 이후 위축되었으나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 등 소위 생계형 창업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기술집약 업종의 신설법인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벤처확인 기업의 수도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기술창업[1] 분위기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. 벤처투자 열기의 소멸과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기술창업 의욕이 위축되고 투자자금이 이탈하면서 상당 수 벤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.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하여 창업활동과 관련된 국가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실제 창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요인을 살펴보고자 서울지역 25개 벤처확인 기업들을 면담하여 창업 실태를 진단하고 미국, 일본, 이스라엘, 싱가포르 등의 기술창업 지원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.

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. ②정책당국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는 기존의 폐단을 불식시키겠다는 '시그널'을 발신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. ③창업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. ④창업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금지원,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질적·양적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. ⑤기술개발 등의 핵심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 확충과 인력확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. ⑥창업 편의성을 제고하여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만들고 ⑦창업 지원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.

1)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·기술혁신·혁신선도·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

# 《 요 약 》

## Ⅰ. 문제제기

□ 최근 창업관련 지표의 전반적 하락과 함께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창업 분위기의 위축도 심각한 수준

- 2004년 1~9월 신설법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.3% 감소하였고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수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감

-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창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응답이 62%를 차지

□ 활발한 창업은 고용확대의 견인차이며 창업활동이 활발해야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

- 고용창출을 주도해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가

- 특히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고용확대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됨

- GEM[2]과 OECD 보고서 등은 높은 창업률과 경제성장이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

□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

2) GEM(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): 미국 BABSON 컬리지와 영국 런던경영대학(LBS)이 주도하는 창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태동기 기업(nascent firm)과 창업 후 42개월 미만의 신생기업(new firm)으로 나누어 창업활동을 파악

- 기존 벤처기업 관련 정책이 상당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했지만, 벤처 문화의 순기능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
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창업 및 성장단계에서 외부의존도가 높아 올바른 정책 환경 조성이 특히 중요

# Ⅱ. 기술창업[3] 현황 및 실태

## 1. 일반창업 현황

□ 국내의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2000년 이후 위축

- 2003년의 신설법인 수는 2000년 대비 19.2% 감소하였고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비율로 표시되는 창업배율도 감소하여 창업 위축을 반영

□ 서비스업종 신설기업의 비중이 높고 2000년 이후 제조업종의 창업활동이 두드러지게 위축

- 2000~2003년 기간 중 전 업종의 신설법인수가 감소추세를 보인 가운데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 등 '생계형 창업'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증가

- 국내에서 생계형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
  · G7국가와 비교하여 규모가 영세한 노동집약 업종의 창업 비중이 높음

## 2. 기술창업 현황

□ 기술집약 업종의 신설법인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벤처확인 기업의 수도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기술창업 분위기의 회복이 지연

3)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·기술혁신·혁신선도·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

- 전기·전자·정밀기기 제조업,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업 분야 등의 신설법인 수가 감소

- 2003년 벤처확인 기업 수는 2001년 대비 32.4% 감소

□ 현 벤처확인 기업의 상당수는 벤처 붐이 일었던 1999~2000년 사이에 창업하였으며 동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석·박사 창업도 급증

- 벤처 붐 시기에 창업한 기업이 39.2%를 차지하며 실험실 창업 지원제도로 석·박사 창업의 비율도 1989년 이전 초기벤처 세대에 비해 크게 증가

## 3. 창업 관련 여건

□ 벤처투자 열기의 소멸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술창업 의욕이 위축

- 과도한 주가 상승과 도덕적 해이로 벤처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

□ 코스닥 시장 침체, 투자자금의 이탈 등으로 상당수 벤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

-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이 2002년 19.6%에서 2003년 50.5%로 증가

-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·투자실적도 2001년 이후 감소

## 4. 창업관련 정책 실태

□ 창업지원 정책의 목적은 인프라 확충 및 직접지원까지 다양하며 지원규모와 실적이 꾸준히 증가

-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, 컨설팅 사업, 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다소 증가

-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보육센터의 활용도와 입주기업의 경영 성과 등은 꾸준히 개선

□ 창업 지원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

- 세계은행과 IMD 등이 발표한 기업환경 평가에서는 창업활동과 관련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

# Ⅲ. 기술창업 애로요인 진단

## 1. 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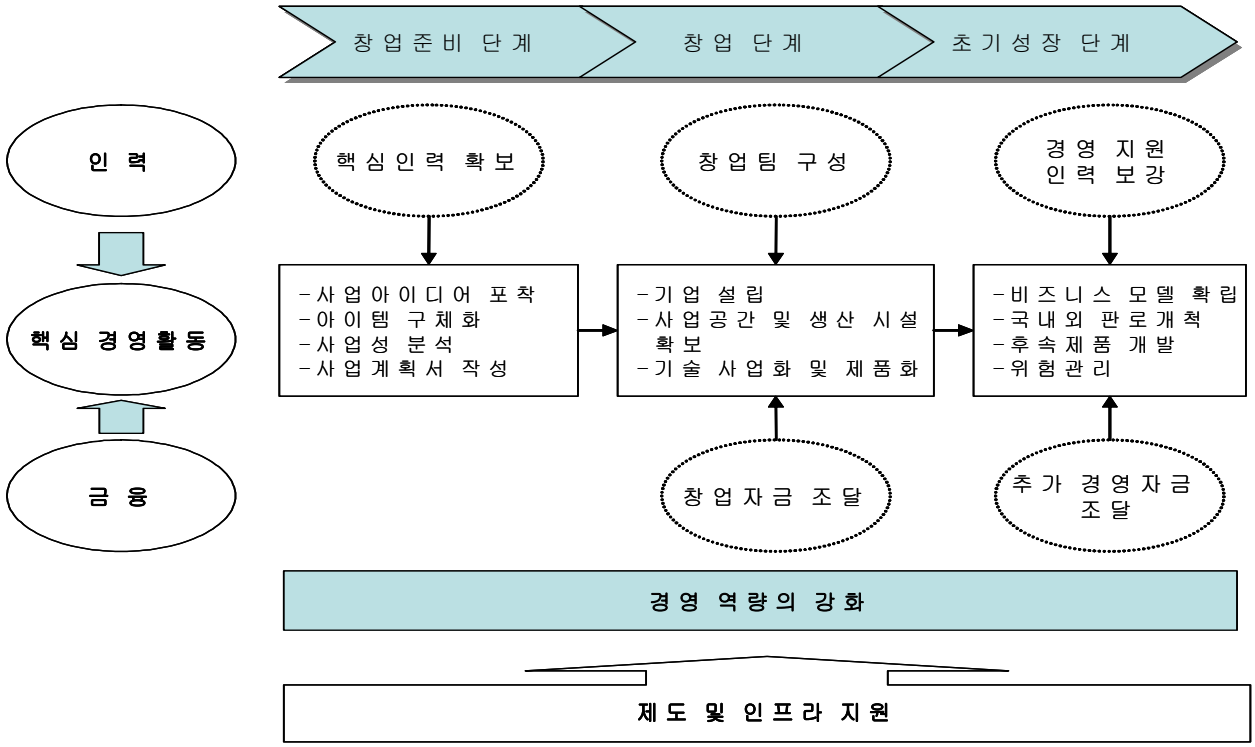
□ 서울 지역 25개 벤처확인 기업들을 면담하여 기술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요인들을 파악

□ 기업설립 시점과 특성에 따라 창업과정을 창업 준비·창업·초기성장·발전 및 회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조사

## 2. 애로요인 진단

□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요인들을 창업인력, 아이디어, 자원 등 경영요소별로 파악

**창업과정의 필요 요소**




## (1) 인력

□ 창업 초기에는 아이템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인력 확보가 중요

- 핵심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창업 자체가 불가능하나 창업 초기의 실패 위험성,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고급 인력 확보에 어려움

□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문 경영인 및 경영지원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

- 엔지니어 출신의 경우 경영 경험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기 쉽고 기획, 재무, 마케팅 등 경영 지원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곤란

- 자금력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유치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 스톡옵션제도의 실효성도 감소

## (2) 경영 역량

□ 창업 초기단계에는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포착하고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데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좌초

- 창업 인력이 창업 실무에 대한 지식, 비즈니스 마인드 등의 기초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

-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

□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 및 사업기회 확보가 어려움

-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성이 있는 제품보다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거나 후속 제품의 적기 시장 진입에 실패하기도 함

- 홍보 및 마케팅, 해외 시장 진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고 현금흐름 부족 등으로 자금운영 상의 위험에 직면

## (3) 금융

□ 창업 단계에서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술 수준과 성장성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이 취약

- 기술 수준과 사업성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전문 평가 인력이 부족

- CEO의 역량, 시장 전망 등의 정성적 요인보다 재무제표, 매출 실적 등 정량적 수치 정보에 의존하기 쉬워 자금이 보수적으로 집행됨

- 투자시장은 낮은 위험으로 단기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선호하여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

□ 전문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부족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행해온 융자 위주의 보수적 자금 집행에 의존하고 있고 대체 회수시장이 미흡

- 벤처버블 붕괴 이후 투자자금과 관련 전문 인력이 급속하게 시장을 이탈

-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자금 조달 및 회수 경로로서의 역할이 미흡

### (4) 창업환경 및 인프라

□ 벤처 붐 냉각 이후 창업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미비

- 선도 기술창업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벤처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부정적 정서가 확산

- 초중고 및 대학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극적

□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사업 실패시의 위험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미작동

- 창업에 따른 기회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고 실패한 기업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인색

□ 창업보육센터의 소프트웨어 지원이 소홀하고 기술 제품화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생산 인프라가 부족

-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자체 공장설립의 위험부담이 큰 창업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생산설비가 부족

### (5) 제도 및 행정절차

□ 창업 단계에서 각종 절차와 규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진입장벽이 됨

- 기업 및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규제가 다소 복잡

- 주식회사 요건 구비와 자본금 충족 등에서 어려움이 있음

□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허가 규제 또한 유·무형의 비용을 초래

- 제품 인허가 기관의 전문 평가능력 부재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거나 동일 제품과 기술에 대한 부처 간 중복 규제와 이견으로 사업화가 지연

# Ⅳ. 선진국의 기술창업 지원정책

## 1. 미국

□ 미 중소기업청(SBA)의 창업지원정책은 직접적 방식이 아닌, 민간투자자, 대학 등으로 하여금 창업 지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특징

- 벤처 캐피탈(VC)로 대표되는 민간 시스템이 창업활성화에 크게 기여

- SBA가 시행하는 「중소기업투자회사(SBIC: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)」 프로그램이 VC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

-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「SBIR(Small Business Research)」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

□ 창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

- 미 전역에 있는 '중소기업육성센터(SBDC: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)'를 통해 원스톱 창업을 지원

- 창업지원 자금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
  ·「LowDoc」이라는 독특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

## 2. 일본

□ 일본은 1999년, 36년 만에 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「창업 촉진」을 법률상으로 명기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천명

- 일본은 '경영혁신 및 창업 촉진'을 새 중소기업정책의 3대 축의 하나로 설정할 정도로 창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

□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,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, 각종 연수 등을 지원

- 미국과 같이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이나 벤처 캐피탈은 매우 적은 편

-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형태의 창업 지원에 적극적

## 3. 이스라엘

□ 이스라엘은 첨단 분야 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성화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정평

-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만든 「요즈마 펀드」가 혁신적 중소·벤처기업을 부흥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

□ 이스라엘의 창업정책은 '기술 인큐베이터(TBI: Technological Business Incubator)'의 출범·가동이 기폭제로 작용

-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,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개발·생산·마케팅까지 전개할 수 있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에 커다란 밑거름으로 작용

- 그 외에, 다양한 형태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

· 포괄적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컨소시움 지원시책인 마그넷 프로그램, 창업에 나서는 기업에 2년간 총 30만불의 자금을 지원하는 「Green House」 프로그램 등을 운영

□ 전세계 유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기업과 선진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

- 이러한 제반 노력의 결실로,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중소기업들에는 전세계로부터 자금이 쇄도

## 4. 싱가포르

□ 싱가포르는 국가과학기술청(NSTB), 경제개발청(EDB) 등의 주도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

- 싱가포르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, 핀란드 등이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자극

- 창업 기업들의 첨단기술 및 이에 바탕을 둔 제품들이 싱가포르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차등적으로 지원

□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과 관련이 깊은 「Technopreneurship 21」는 1999년, 교육, 설비, 규제, 금융 등 4개 부문에 걸친 지원시책으로 구성[4)]

□ 싱가포르는 자국의 국가적 특성에 맞춰, 능력 있는 중소·벤처기업들이 연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점

-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라이선싱 제도를 장려

4) http://www.actetsme.org/sing 등을 바탕으로 정리

# Ⅴ. 정책제언

## 1. 기술창업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제고

□ 창업 및 벤처 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 하고 유관기관과 지원 인프라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

- 지원제도를 유망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

□ 기술개발과 창업에 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창업관련 정책 부서의 기능을 확충

- 창업 초기에는 기술개발 관련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간접 인프라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

## 2. 자생력 있는 창업기업들의 생존 토양을 조성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

□ 정책당국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는 기존의 폐단을 불식시키겠다는 '시그널'을 발신

- 시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인

□ 기업출신 전문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라이센싱 제도를 장려

- 분사(spin-off)된 인력이나 퇴출된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을 적극 장려

- 창업 과정에서 기술자가 기술개발 시 기업과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

□ 창업교육을 전문화,내실화하고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

- 기업, 언론과 사회가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동참

- 미국, 영국, 일본 등 선진국의 창업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

- 창업·기업가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 과정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창업과 직결되는 현장 학습을 충실하게 교육

## 3.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

□ 기업파산 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기의 기회를 지원

- 불법 및 악의가 아닌 부도의 경우 기업가가 회생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

□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

-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DB화하여 기업과 정책 당국이 활용

- 부도기업인이 기술창업 컨설턴트, 창업보육기관 운영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실패 및 재기경험을 전파

## 4.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혁신

□ 창업 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자금지원, 평가 시스템을 구축

- 미래지향적 요소에 의한 금융평가 시스템의 조속한 확립을 통해, 기술혁신형 유망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인

□ 정책금융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KOSBIR을 발전적으로 보완

- 중복지원의 시정, 지원예산의 사전조정 기능 및 사후평가 기능을 제고하고 자금 지원의 '일몰제(sunset)' 도입을 확대

□ 기업은행과 신보, 기보 등을 총괄·감독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원스톱 지원

- 지주회사인 '중소기업 지원 은행 그룹'은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 감독하고, 중소기업은행과 보증회사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출과 보증을 시행

□ 중소·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질적·양적으로 대폭 확대

- 경륜 있고 우수한 인력을 창업지원 자금 심사 인력으로 적극 활용

-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'창업 지원'에 필요한 자금을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 이상으로 대폭 확대

□ 창업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털 등 금융투자회사의 역량을 차별화하고 대기업의 지분투자를 적극 검토

- 창업관련 자금 지원은 물론 효율적인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'창업지원 전문 벤처 캐피털'을 적극 양성

- 공정거래법상의 관련조항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

## 5. 경영역량 확충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

□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전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

- 창업기업 지원 관련 서비스마다 독립된 기관을 유지하되, 이들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끔 「Business Link」를 형성·운영

- 이를 바탕으로, 창업기업이 한 곳을 접촉하면 타 서비스에 모두 연계가 되는 '원스톱 지원 시스템'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

□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「기술개발·생산·마케팅(T-P-M)」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'차등 지속지원 시스템'을 구축

- 이들 기업에게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'수요견인 전략(Demand Pull Strategy)'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

- 객관적인 인증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 조성

- 글로벌 마켓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 하에 개발토록 지원

□ 아웃소싱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핵심 사업에 매진하도록 유도

- 부동산, 시설장비 등에 대한 리스를 활성화하고, 동 업종의 공동 생산시설 구축이 가능할 경우 적극 지원

□ 병역특례 인력 배정을 확대하고 겸직·휴직 인정제도를 존속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채용, 파견 근로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폭넓게 예외를 인정

-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기술 인력의 생활기반을 마련

- 중소·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시 인건비 부분 허용

## 6. 창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

□ 창업관련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창업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
-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

-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

□ 창업관련 정보 시스템을 재정비

- 부처별 지원시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콜 센터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

□ 유연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

- 소규모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외부 차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

## 7. 창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조성

□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정부 및 지자체가 적극 지원

- 지방의 기술 창업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 추진

- 창업보육센터(BI)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

□ 지역별 벤처 클러스터의 특화 육성

- 지역별 벤처 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명확화하고 대학 및 연구소 주도, 대기업 주도, 지역특화형, 실리콘 밸리형 등으로 발전 전략을 차별화하여 육성

# Ⅰ. 문제제기

## 창업활동이 계속 저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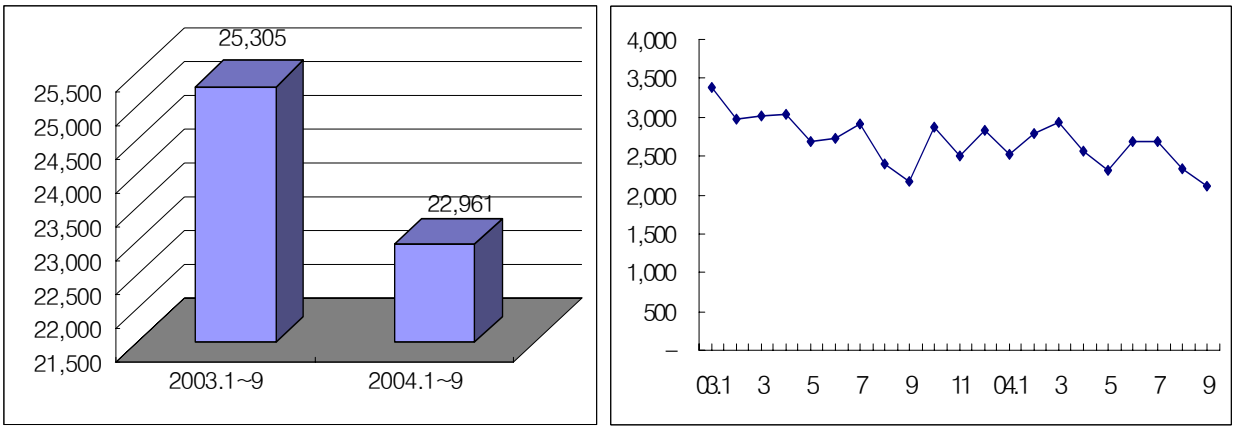
□ 2004년 1~9월의 신설법인 수는 22,961개로 전년 동기 대비 9.3% 감소

- 지난 9월 신설법인 수는 2,103개로 전월 대비 10.0% 감소
  · 1999년 5월의 2,085개 이후 5년 4개월 만의 최저치

- 부도업체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(창업배율)도 13.0배로 하락
  · 연초 17.9배를 기록한 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

**월별 신설법인 수 현황 (2003.1~2004.9)**

(단위: 개사)




자료: 한국은행, 『어음 부도율 동향』, 각월 (전국 8대 도시 기준)

□ 창업사업계획 승인 건수가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감[5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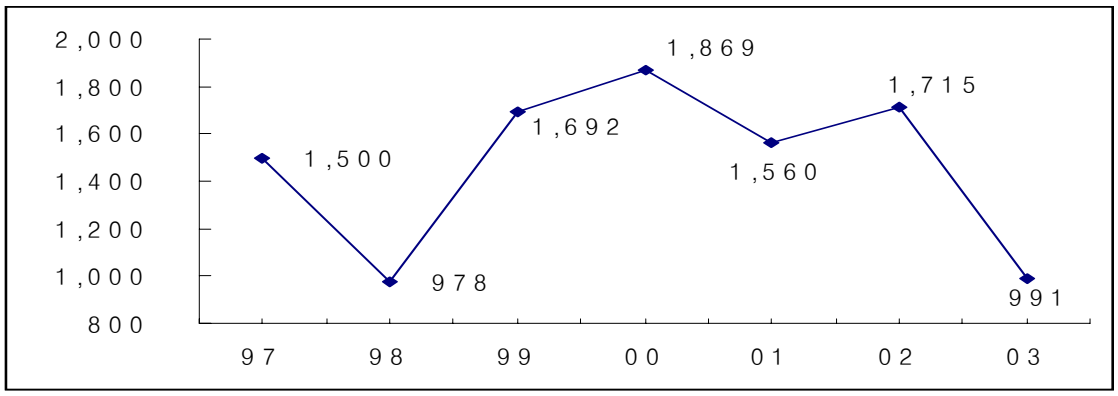
- 2003년 중소기업의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수는 991건으로 전년도 1,715건에 비해 42.2% 감소

- 최근 5년간(98년~02년) 평균 승인건수 1,562건 대비 36.5% 감소

5) 공장설립에 필요한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수의 감소는 중소 제조기업의 창업 감소를 의미

**창업사업계획승인 건수**

(단위: 개)




자료: 중소기업청

□ 기업 경영진이 체감하는 창업 분위기의 위축도 심각한 수준

-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6월 국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창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응답이 62%를 차지[6)]
  · 매우 위축(17%), 위축(45%), 보통(22%), 활발(14%), 매우 활발(2%)

## 중소기업 창업은 고용확대의 견인차

□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경우처럼 고용창출이 활발하지 않은 안정 성장 기조로 접어들 것이 예상

-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높은 노동집약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식·자본 집약산업의 비중은 증가

- 경제성장이 추가적인 고용 증대를 수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증

□ 고용창출을 주도해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봉착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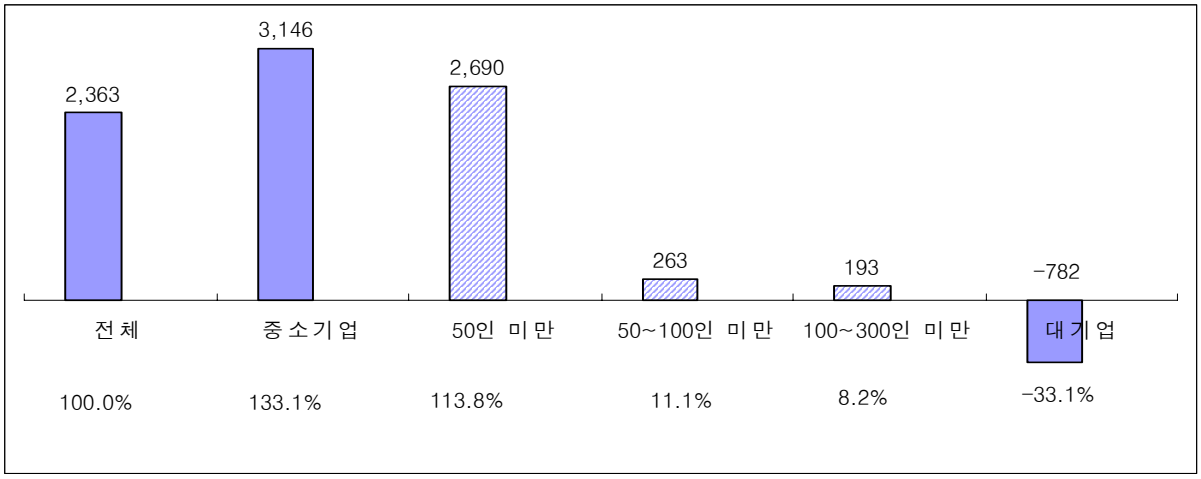
- 최근 10년 간 대기업의 고용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

6) 김종년 등, "기업가정신의 약화와 복원방안", 삼성경제연구소, 2004.6

· 1993년~2002년 사이 236만 명의 고용 증가분 중에서 중소기업이 창출한 순고용은 314만 명인 반면 대기업 순고용은 마이너스 78만 명

**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(전산업, 1993~2002년)**

(단위: 천 명)




주: 중소기업 범위는 모든 산업에서 종사자수 1~299인 기준임
자료: 통계청, 『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』, 각 년도

-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격차가 확대
  · 50인 미만 중소기업 고용기여도는 1993년 60.7%에서 2002년 69.3%로 8.6%p 상승
  · 1,000명 이상 대기업 고용기여도는 1993년 12.4%에서 2002년 5.3%로 7.1%p 하락

□ 특히 벤처기업[7]의 창업은 기존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고용확대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됨

- 벤처기업의 종업원 수는 1999년 19만5천명에서 2002년 현재 32만9천명으로 68.7% 증가[8]
  · 전체 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.8% 수준

7) 벤처기업은 첨단기술 사업영역의 기업으로서 성공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정의
8) 통계청, 「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」, 각년도

## 창업활동이 활발해야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

□ 활발한 창업활동은 경제활력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소

- GEM[9]은 G7국가들의 총 창업활동지수와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계수가 0.76이라고 보고
  ·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제외할 경우 상관계수는 0.53, 농업부문 비중이 높은 국가까지 제외하면 상관계수는 0.69

- OECD[10] 보고서는 신생기업들이 자본과 노동, 기술 등의 결합을 보다 효율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
  · 신규 창업기업과 기존 기업이 경쟁과 협력 관계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며 높은 창업률과 경제성장은 플러스 상관관계를 가짐

□ 기술창업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

-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과 퇴출을 통해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
  · 고객의 새로운 요구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격화되는 경쟁 하에서 생존

- 신생기업의 활발한 참여는 기업 간 기술 및 품질경쟁을 유발하고 신규시장을 개척하도록 자극함

## 기술창업 환경의 진단과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

□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창업·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함

---

9) GEM(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): 미국 BABSON 컬리지와 영국 런던경영대학(LBS)이 주도하는 창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태동기 기업(nascent firm)과 창업 후 42개월 미만의 신생기업(new firm)으로 나누어 창업활동을 파악

10) OECD, "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The OECD Countries", 2003

- 기존 벤처기업 관련 정책이 상당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했지만, 벤처 문화의 순기능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
  · 90년대 말 벤처 열풍은 경제 전반에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음
  · 특히 생계형 중심의 양적 창업에서 탈피하여 기업가형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

-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벤처 마인드의 계승과 기술창업의 활성화가 필수적
  · 기술창업 부진이 고착화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잠재력 확충이 불가능

- 기술혁신형[11] 중소기업은 창업 및 성장단계에서 외부의존도가 높아 올바른 정책환경 조성이 중요
  · 자생력을 갖추고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기술과 자본, 경영의 효과적인 결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

□ 과거 정부의 벤처육성은 정책 추진체계가 미약했고 부처 간 연계도 부족

- 양적 성장에 치중한 지원으로 경쟁력 없는 벤처를 양산하였고 벤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
  · 기술창업과 성장을 위한 토양이 척박한 상황에서 자금공급 위주의 단기 육성에 치중
  ·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의 기초적 간접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

- 신성장동력 육성, 고용창출, 균형 발전 등의 국정 아젠다를 추진하면서 벤처·창업 정책이 제대로 발굴되고 반영되지 못했음

11) 최근 정부는 '첨단·고도기술 제조업' 과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'고부가가치 기업 지원 서비스업' 을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할 것을 밝힌 바 있음(재정경제부, "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", 2004.7)

· 정책과잉에서 정책과소로의 빠른 전환 등에서 보듯이 효율성과 일관성이 약했음

- 창업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존속

·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만족은 여전

□ 창업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유인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

-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창업 관련 여건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할 필요

# Ⅱ. 기술창업[12] 현황 및 실태

## 1. 일반 창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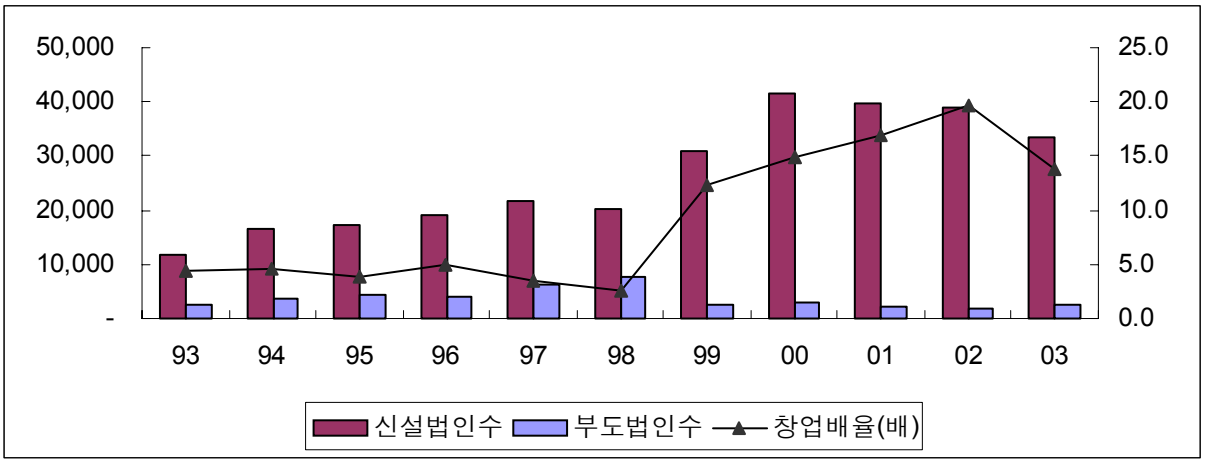
### 창업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생계형 창업은 상대적으로 활발

□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2000년 이후 위축

- 꾸준히 증가했던 신설법인 수가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
  · 신설법인 수: 41,460(2000년)→33,497(2003년): 19.2% 감소

-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비율로 표시되는 창업 배율이 하락하여 창업 분위기 위축을 반영
  · 창업 배율(=신설법인 수/부도법인 수): 19.8(2002년) → 13.8(2003년)

**연도별 신설법인 수 (8대 도시 기준)**




자료: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, 'http://stat.smba.go.kr'

□ 신설법인 수의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창업 열기의 위축이 두드러짐

12)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·기술혁신·혁신선도·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

- 2003년 수도권의 신설법인 수는 25,249개로 75.4%를 차지
  · 서울(22,448개) 부산(3,108개), 인천(2,079개), 대구(1,629개)의 순

- 2000~2003년 기간 동안의 신설법인 수는 수도권이 22.0% 감소했고, 지방이 9.5% 감소하여 벤처 붐 이후 수도권의 창업 열기 냉각을 반영
  · 도시별로는 서울(-22.8%), 인천(-19.7%)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유일하게 수원(2.2%)이 증가

**지역별 신설법인 수 비교(8대 도시 기준)**

(단위: 개, %)

| | 수 도 권 | | | 지 방 | | | |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서울 | 인천 | 수원 | 부산 | 대구 | 대전 | 광주 | 울산 | |
| 2000년 | 29,059 | 2,589 | 703 | 3,251 | 1,967 | 1,555 | 1,595 | 741 | 41,460 |
| 2003년 | 22,448 | 2,079 | 722 | 3,108 | 1,629 | 1,299 | 1,537 | 675 | 33,497 |
| 비 중 (2003년) | 67.0 | 6.2 | 2.2 | 9.3 | 4.9 | 3.9 | 4.6 | 2.0 | 100 |
| 증감율 (00~03년) | -22.8 | -19.7 | 2.7 | -4.4 | -17.2 | -16.5 | -3.6 | -8.9 | -19.2 |

자료: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, 'http://stat.smba.go.kr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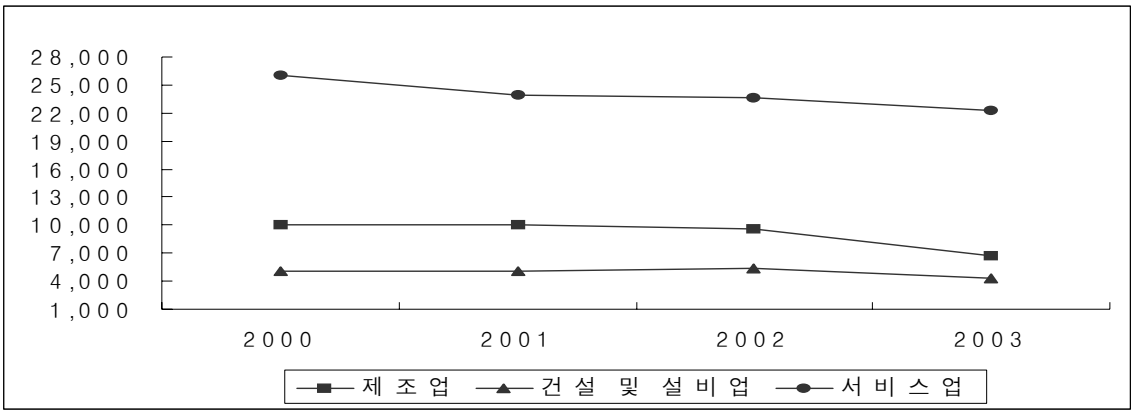
□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 신설기업의 비중이 높고 2000년 이후 제조업종의 창업활동이 두드러지게 위축

- 2003년 전체 신설법인에서 서비스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.5%
  · 서비스업(66.5%), 제조업(20.2%), 건설 및 설비업(12.8%), 농립어업 및 광업(0.2%), 기타(0.3%)의 순

- 2000~2003년 기간 중 전 업종의 신설법인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의 위축이 특히 두드러짐
  · 제조업종: 9,999(2000년) → 6,768(2003년): 32.3% 감소
  · 서비스업종: 26,022(2000년) → 22,262(2003년): 15.6% 감소
  · 건설 및 설비업: 5,087(2000년) → 4,293(2003년): 14.4% 감소

**업종별 신설법인 수 현황**

(개사)




자료: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, 'http://stat.smba.go.kr'

- 전체 서비스업종의 신설법인 수가 감소했으나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 등 소위 '생계형 창업'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증가

· 도·소매업 신설법인수: 5,756(2000년)→8,753(2003년): 52.1% 증가
· 음식·숙박업 신설법인수: 244(2000년)→248(2003년): 1.6% 증가

##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음

□ 우리나라는 GEM 연구의 총창업활동지수[13]를 기준으로 할 때 2002년까지 창업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국가군으로 분류

-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창업 활동의 증가, 벤처창업 지원 정책 등에 기인

- 2003년의 경우 해당 조사의 부재로 국제비교가 불가하지만 신설법인 수의 감소추세로 보아 창업활동이 상당 폭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

13) TEA(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): 18~64세 인구 중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42개월이 안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

**총창업활동지수 순위**

| 국가 | 2000년 | 2001년 | 2002년 | 2003년 |
|---|---|---|---|---|
| 한국 | 2 | 4 | 4 | n.a |
| 뉴질랜드 | n.a | 2 | 6 | 5 |
| 미국 | 3 | 7 | 11 | 7 |
| 호주 | 4 | 3 | 15 | 8 |
| 싱가포르 | 19 | 27 | 21 | 21 |
| 일본 | 20 | 28 | 37 | 29 |
| 평가 대상국 수 | **21** | **29** | **37** | **31** |

주: 1)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국내 해당기관의 조사 중단으로 순위가 발표되지 않음
2)비교대상국은 세계은행이 'Doing Business 2004'에서 기업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국가 중심

자료: GEM,『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: Executive Report』,각 년도

□ 제조업과 첨단산업분야의 창업활동이 두드러지는 G7 국가들에 비해 국내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음[14)]

- G7 국가와 비교하여 국내는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가족중심으로 운영하는 노동집약 업종의 창업이 많음

- 경제 및 경영환경이 악화될수록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생계형 창업활동은 증가함을 시사

# 2. 기술창업 현황

## 기술창업 분위기의 회복이 지연

□ 기술집약 업종의 신설법인 수 감소가 두드러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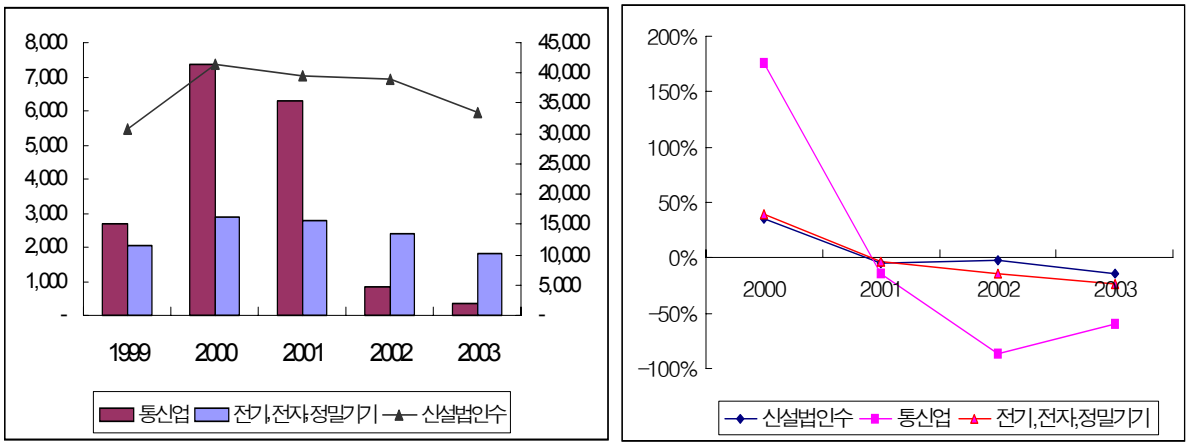
- 전기·전자·정밀기기 제조업,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업 분야 등의 창업활동이 크게 위축

14) 박윤재·윤현덕·김영수, “한국의 창업여건과 활성화에 관한 국제비교연구-GEM 연구를 중심으로”, 중소기업연구, 2001.9

· 소프트웨어 통신업: 7,343(2000년)→336(2003년): 95.4% 감소
· 전기·전자·정밀기기업: 2,876(2000년)→1,825(2003년): 36.5% 감소

**기술관련 업종 창업 추이 (8대 도시 기준)**

신설법인수_ 전년대비 증감율




자료: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, 'http://stat.smba.go.kr'

□ 벤처확인[15] 기업의 수는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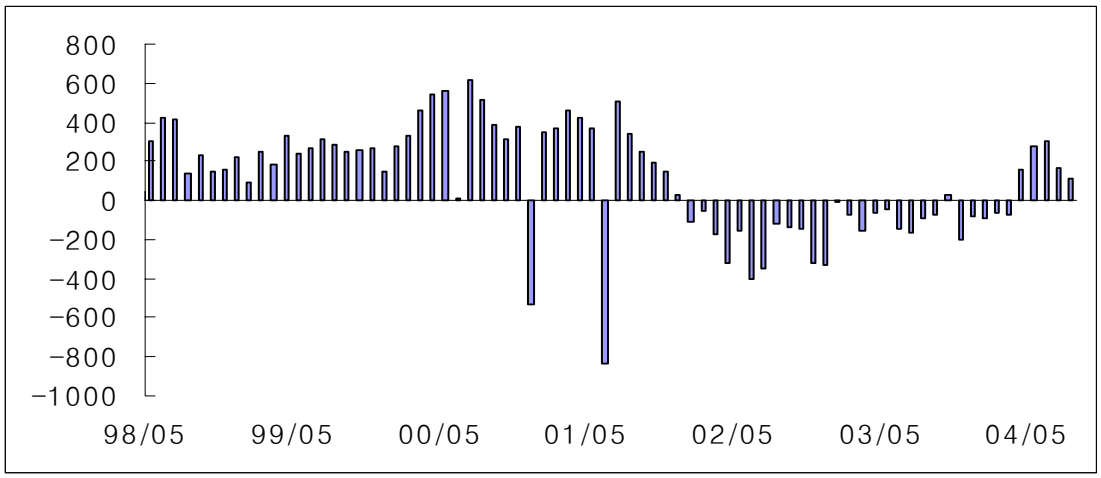
- 벤처확인 기업의 수는 2001년 11,392개에서 2003년 7,702개로 32.4% 감소[16]
· 유형별 분포: 신기술(74.2%), 연구개발(18.9%), 벤처투자(6.8%)
· 벤처기업의 위상: GDP의 3%, 총수출의 4%, 총취업자의 2%를 차지[17]

**벤처확인 기업수 연도별 현황**

| 시기 | 1998년 | 1999년 | 2000년 | 2001년 | 2002년 | 2003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벤처기업수 | 2,042 | 4,934 | 8,798 | **11,392** | 8,778 | **7,702** |

15) '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' 에 의거,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, 벤처캐피탈, 연구개발 기업, 신기술 기업으로 분류
16) 벤처기업의 수는 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나 벤처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유일하고 일관되게 집계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함
17) 중소기업청, "신벤처기업 정책방향", 2004.7

**벤처확인 기업수 월별 증감현황 (1998.5~2004.8)**




주: 2000년 12월과 2001년 6월의 두드러진 감소는 벤처확인자격 기간만료 및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자격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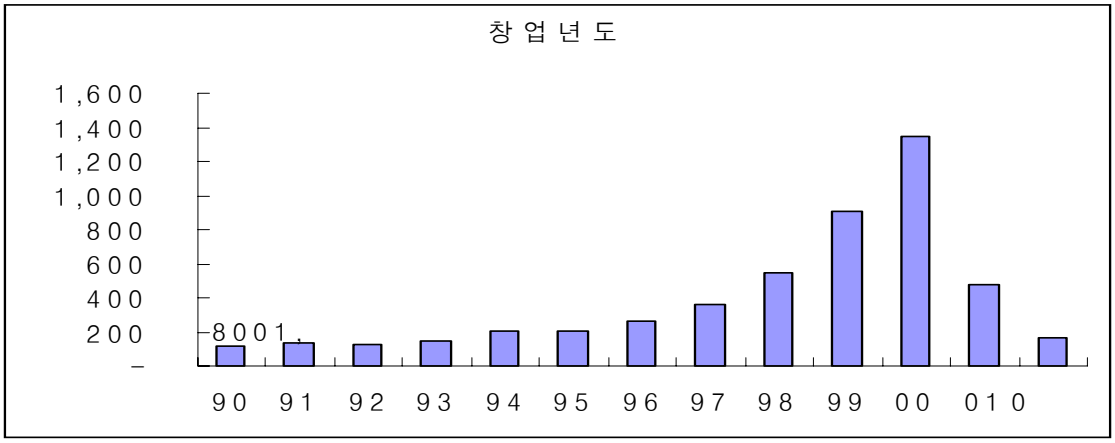
자료: 중소기업청, 『벤처기업 현황』, 각월

□ 현 벤처확인 기업의 상당수가 벤처 붐 시기에 창업

- 벤처 붐이 일었던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이 2,259개로 전체의 39.2%를 차지하며 평균 업력은 8년으로 나타남[18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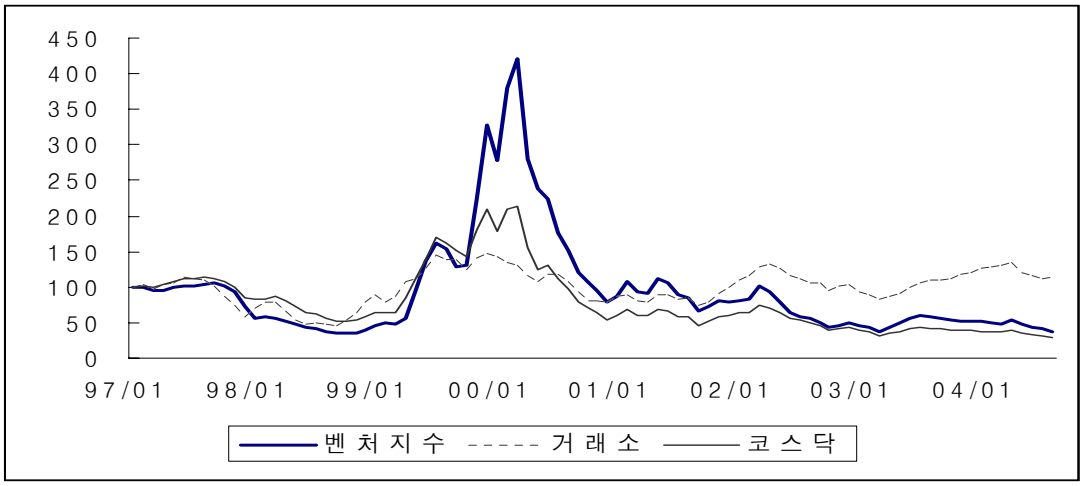
**창업년도별 벤처기업 분포**

(개사)




92

**지수별 추이(1997.1 ~ 2004.8)**




자료: http://www.kosdaq.com(코스닥증권시장), http://www.kse.or.kr(증권거래소)
주: 원지수를 1997.1=100 으로 재조정하여 계산

- 벤처지수 급락은 경기 침체 외에 벤처 비리, 업계 분위기 위축 등의 내부적 요인에 기인

□ 코스닥 시장 침체, 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상당수 벤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

-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이 2002년 19.6%에서 2003년 50.5%로 증가

**벤처기업의 자금사정**

(단위: 기업수, %)

| 매우 양호 | 양호 | 보통 | 어려움 | 매우 어려움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06(7.2) | 843(14.9) | 1,563(27.5) | 1,820(32.1) | 1,042(18.4) | 5,674(100) |

자료: 중소기업청, 『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』, 2003. 9

□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실적과 투자실적도 2001년 이후 감소

- 창업투자조합의 수는 2000년 194개에서 2002년 78개로 59.8% 감소했고, 결성액은 1조 4,341 억원에서 8,084 억원으로 같은 기간 43.6% 감소

**연도별 창업투자조합 결성실적**

| 구 분 | 1998 | 1999 | 2000 | 2001 | 2002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조합수(개) | 15 | 82 | 194 | 106 | 78 |
| 결성액(억원) | 1,055 | 4,885 | 14,341 | 9,993 | 8,084 |

주: 2001년 및 2002년은 신기술투자조합 등 포함
자료: 중소기업청,『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』, 2003. 9

- 창업투자회사 투자규모는 2000년 1,901개사를 대상으로 2조 75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2002년에는 1,460개사와 5,652억 원 투자에 그쳤음

**연도별 창투사 신규 투자실적 추이**

| 구 분 | 1999년 | 2000년 | 2001년 | 2002년* |
|---|---|---|---|---|
| 투자금액(억원) | 9,502 | 20,075 | 8,893 | 5,652 |
| 업체수(개) | 1,457 | 1,901 | 1,117 | 1,460 |

주: 2002년은 12월 투자실적 미확정분 포함
자료: 중소기업청, 『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』, 2003. 9

# 4. 창업관련 정책 실태

## 창업지원 정책의 목적은 인프라 확충에서 직접지원까지 다양

□ 창업 기업인을 발굴·육성하고 창업 동기를 부여하는데 주력

- 창업 교육 및 분위기를 조성
  · 창업 아이템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전 교육을 실시하고, 대학생에 대해 창업실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아이템을 포상

□ 창업 포기나 지연을 초래하는 제약요인을 제거

- 창업과정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축
  · 인·허가의 일괄의제 처리, 교수·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립 간소화 등

· 창업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

□ 창업 관련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를 확충

- 기업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영자원과 경험이 부족한데서 오는 시행착오 및 어려움을 최소화
  · 창업보육센터 등 시설·장소 인프라 확충, 창업관련 정보 제공, 유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
  · 창업단계 기업들에 대한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자문비용을 보조

□ 경영자원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유인책 마련

- 창업 단계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금, 인력 등의 지원체계 마련
  · 신용 보증 대출을 병행하고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

**창업관련 지원정책 현황**

| 분야별 관련 정책 | | 내 용 |
|---|---|---|
| 창업 환경 조성 | 창업 교육 및 창업 분위기 조성 | · 창업 강좌<br>· 창업 동아리 지원<br>· 창업 경연대회 및 창업 로드쇼 |
| 제도 및 절차 | 창업 편의성 제고 | ·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및 승인기간 단축<br>· 실험실 공장 설립 승인 제도<br>· 창업상담회사 통한 창업절차 대행 |
| 창업 인프라 확충 | 창업 보육 및 컨설팅 | · 창업보육센터 건립<br>· 창업상담회사 컨설팅 지원 |
| | 창업 정보 제공 | · 창업넷(창업포탈 사이트) 운영 |
| | 창업 입지 제공 | · 벤처기업 전용단지, 산업기술단지(테크노 파크) 조성 |
| 금융 지원 | 자금 공급 | · 중소·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|
| | 세제 지원 | ·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<br>· 창업지원기관(보육센터, 투자자 등) 조세 감면 |
| 인력 지원 | 우수인력 확보 지원 | · 교수·연구원 창업 시 휴·겸직 허용<br>·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<br>· 스탁옵션제도 운영 |

자료: 중소기업청

## 정책 지원 규모와 실적은 꾸준히 증가

□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

- 1999년 이후 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

- 창업상담회사의 창업절차 대행관련 지원은 감소 추세
  · 2000년 이후 중소기업의 창업이 감소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 지원 규모도 함께 감소

□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컨설팅사업 지원규모는 다소 증가

- 창업보육 센터 지원은 센터 신규 건립에 대한 지원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
  · 1999년 546억 원에서 2003년 216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

- 창업상담회사의 사업타당성평가, 사후관리 등의 컨설팅 관련 지원규모는 증가 추세(2003년 15억 원 규모)

**창업지원사업의 추이**

(단위: 억 원)

| 사업명 | 1999 | 2000 | 2001 | 2002 | 2003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창업분위기 조성 | 17 | 24 | 26 | 29 | 29 |
| 창업절차대행 | 446 | 828 | 755 | 285 | 302 |
| 창업보육·컨설팅 | 556 | 507 | 305 | 304 | 231 |

자료: 중소기업청

□ 창업 보육센터의 활용도와 입주 기업의 경영 성과 등은 꾸준히 개선

- 보육실 수 대비 입주기업의 수는 1999년 0.75에서 2003년 0.82로 증가

- 입주기업 당 매출과 고용인원이 크게 증가
  · 매출액/입주기업: 1.67억원(1999년) → 2.32억원(2003년)
  · 고용인원/입주기업: 2.94명(1999년) → 5.08명(2003년)

- 졸업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졸업기업의 생존율도 비교적 양호
  · 최근까지 졸업한 기업의 수는 2,849개이며 2003년 현재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72.6% 수준
  (운영 중인 기업: 1,886개, 인수합병기업: 181개, 휴·폐업: 782개)

**창업보육센터 현황**

(단위: 개사,억 원,명,%)

| | 2000 | 2001 | 2002 | 2003 |
|---|---|---|---|---|
| 창업보육센터 수 | 220 | 261 | 275 | 289 |
| 보육실수 | 2,917 | 4,339 | 4,628 | 4,884 |
| 입주기업 | 2,188 | 3,297 | 3,717 | 4,020 |
| 입주기업/보육실수 | 75.0 | 76.0 | 80.3 | 82.3 |
| 입주기업 매출액 | 3,645 | 6,475 | 8,295 | 9,315 |
| 고용인원 | 6,442 | 15,531 | 19,762 | 20,409 |
| 지적재산권 | - | 1,921 | 2,443 | 3,909 |
| 졸업기업수 (누계) | 195 | 995 | 1,577 | 2,849 |

자료: 중소기업청

□ 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최근 들어 다소 증가

- 지원 금액은 1999년 7,620억 원에서 2000년 2,115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01년 이후 다소 회복

- 신용대출 지원업체의 수와 대출금액은 2003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지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.3%에 불과

**창업지원 자금 규모**

(단위: 억원, 개사)

| | 1999 | 2000 | 2001 | 2002 | 2003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원예산 | 7,500 | 2,115 | 2,600 | 2,500 | 3,200 |
| 실제 지원금액 | 7,620 | 2,115 | 2,660 | 2,700 | 3,200 |
| 실제 지원업체수 | 2,442 | 1,032 | 1,274 | 1,126 | 1,447 |
| 신용대출금액 | 38 | 108 | 59 | 180 | 456 |
| 신용대출 지원업체수 | 27 | 73 | 41 | 135 | 363 |

자료: 중소기업청

## 창업 지원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

□ 세계은행[19]이 발표한 창업 및 폐업 여건, 고용환경 등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창업 활동과 관련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

- 창업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12단계로 145개국 가운데 104위를 차지하였으며 창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높은 수준
  · 창업에 걸리는 평균 시간: 22일
  · 창업에 필요한 비용: 1인당 국민총소득[20](GNI)의 17.7%,
  · 창업을 위해 예치해야 하는 금액: 1인당 국민총소득의 332.0%

-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된 국가는 뉴질랜드, 미국, 싱가포르, 홍콩, 호주 등의 순으로 창업 절차, 시간과 비용에서 우위
  · 국내 창업 환경은 OECD 평균 대비 열악

19) World Bank, 『Doing Business in 2005』, 2004
20)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3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는 12,020 달러

**국별 창업 및 폐업 환경 비교**

| | 창업절차 (단계) | 창업소요일수 (일) | 창업 비용 (% 1인당 GNI) | 폐업소요일수 (년) | 폐업비용 (% 자산대비 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한국 | 12 | 22 | 17.7 | 1.5 | 4 |
| OECD 평균 | 6 | 25 | 8.0 | 1.6 | 6.8 |
| 뉴질랜드 | 2 | 12 | 0.2 | 2.0 | 4 |
| 미국 | 5 | 5 | 0.6 | 3.0 | 8 |
| 싱가포르 | 7 | 8 | 1.2 | 0.8 | 1 |
| 홍콩 | 5 | 11 | 3.4 | 1.1 | 8 |
| 호주 | 2 | 2 | 2.1 | 1.0 | 8 |
| 일본 | 11 | 31 | 10.6 | 0.5 | 4 |

자료: World Bank, 『Doing Business in 2005』, 2004

□ IMD가 2004년 발표한 기업관련 경쟁력 평가지수에서도 기업설립이 용이한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5.46점(10점 만점)으로 39위를 차지

- 2002년에는 7.19점으로 18위를 차지한 바 있어 최근의 창업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

# Ⅲ. 기술창업 애로요인 진단

## 1. 조사 개요 및 면담업체 특성

□ 25개 벤처확인 기업들을 면담하여 기술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요인들을 파악

**조사 개요**

| |
|---|
| · 조사 시기: 2004년 8월 1일 ~ 9월 15일 |
| · 조사 대상: 서울 지역 벤처확인 기업 25개 |
| ① 벤처넷에 등재된 예비벤처기업 6개 |
| ② 서울중기청 벤처확인기업 14개(기술혁신전략과제 선정업체 중심) |
| ③ 코스닥시장 신규등록기업 2개, 등록심사 보류·기각 기업 3개 |
| · 조사 방법: 서면 질의서 발송 후 대면 또는 유선 인터뷰 |
| · 조사 내용: 창업 과정의 애로요인과 해결 방법, 정책지원 활용 사례 및 만족 여부, 개선방향 및 건의사항 |

- 업종별[21]로는 통신장비, 전기기기, 정밀기기, 바이오, 환경기술 등이 속한 첨단제조분야의 기업이 가장 많음
  · 업종: 첨단 제조(15개),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(10개)

- 기업연령은 창업 후 4년 이내 기업이 12개, 4년 이상 기업이 13개
  · 창업 단계(3개), 초기성장 단계(9개), 발전 및 회수 단계(13개)

- 창업 형태별로는 퇴직 후 일반 창업이 16개사로 가장 많았고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0개사
  · 형태[22]: 일반 창업(16사), 교수 창업(5사), 학생 창업(4사)

21) 벤처기업의 업종은 첨단제조, 일반제조, 정보통신 소프트웨어, 기타의 4가지로 분류. '첨단제조'는 IT, NT, BT, ET 등의 분야,'일반제조'는 기계·금속 등의 전통 제조 분야,'정보통신 소프트웨어'는 IT 서비스 분야, 기타는 건설, 유통 및 농수산업 분야

· 창업자의 이전 직장 유무(교수 휴·겸직 포함): 있다(18), 없다(3)

□ 기업설립 시점과 특성에 따라 창업과정을 창업 준비·창업·초기성장·발전 및 회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조사

- 창업 준비 단계는 창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사업 착수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인들의 분석이 이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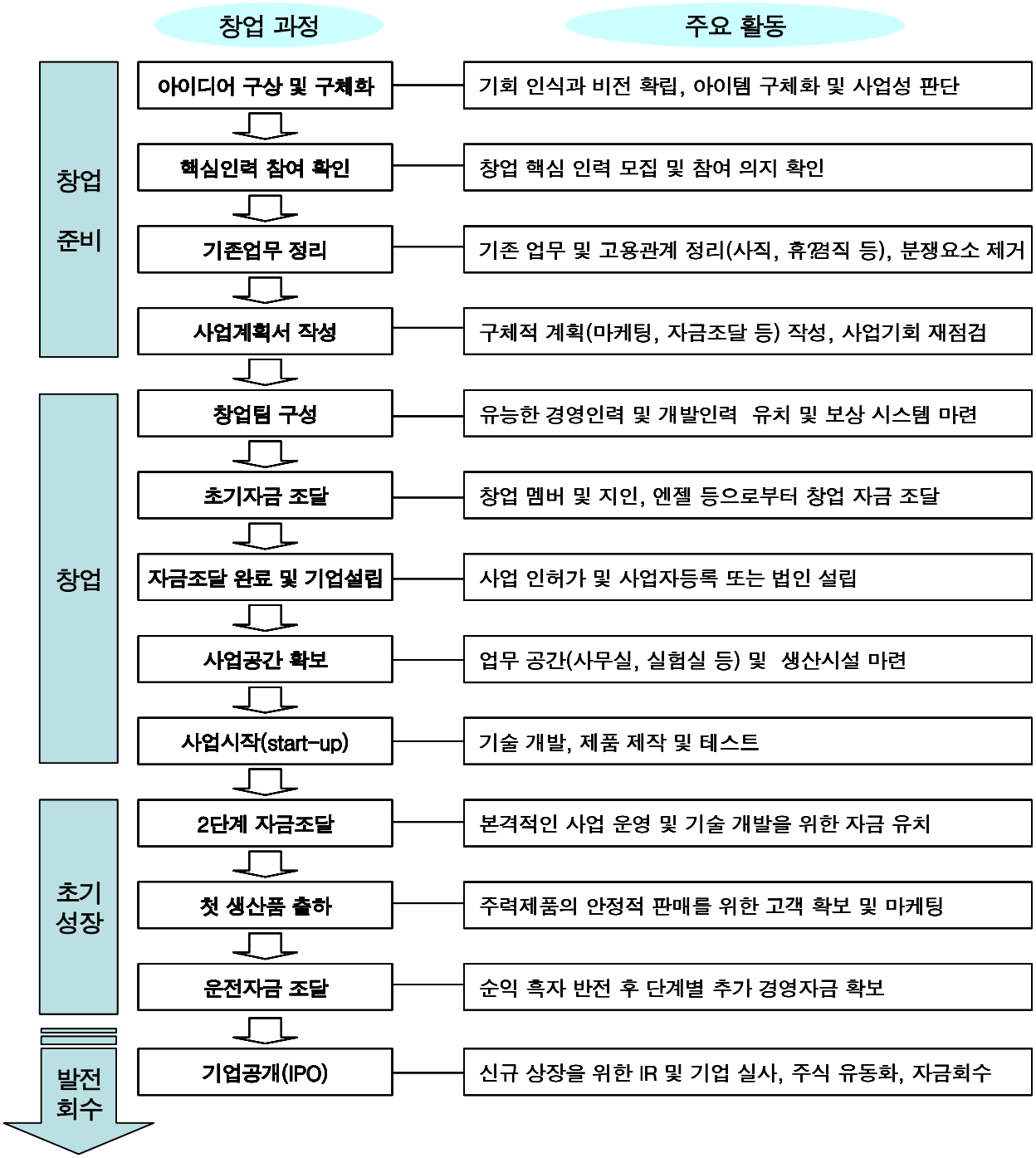
- 창업 단계는 실질적인 기업설립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창업팀을 구성하고 사업공간을 확보하는 등 사업요건을 구비해야 함

- 초기성장 단계는 기술 개발 성공을 통해 첫 제품을 생산하고 시판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역량을 축적

- 발전 및 회수 단계는 제품 추가개발, 신규 시장 진입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 가치의 수확과 분배가 발생하기 시작

22) 교수·연구원의 실험실 창업 중 대학원생의 창업을 학생 창업으로 분리

## 창업 단계별 주요 활동




자료: 존 L.네샤임, 『벤처 창사 A to Z』(서울 : 한경 PC라인, 2000), pp26~28 을 국내 상황에 맞추어 수정 및 재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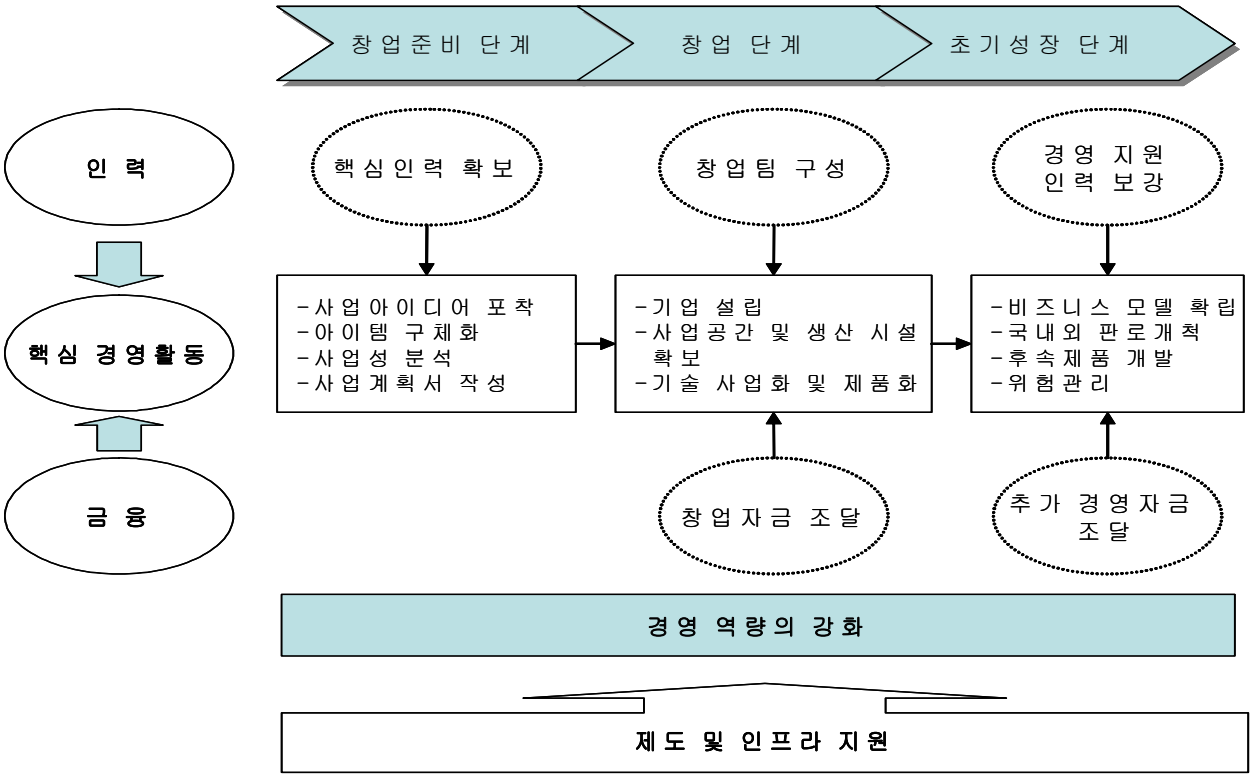
## 면담업체 개별 특성

| | 설립시점 | 현재 단계 | 주요 생산품 | 창업형태 | BI 입주경험 | 창업자 직장경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2004.4 | 창업 | 94 GHz MIMIC | 교수 | 유 | 유 |
| 2 | 2003.12 | 창업 | 무선 통신장비 | 일반 | 무 | 유 |
| 3 | 2003.12 | 창업 | 슬러지 처리장치 | 일반 | 무 | 유 |
| 4 | 2003.7 | 초기 성장 | Low SAR Antenna | 교수 | 유 | 유 |
| 5 | 2003.5 | 초기 성장 | 광전송망 감시 시스템 | 일반 | 무 | 유 |
| 6 | 2003.2 | 초기 성장 | 네트웍 카메라 | 일반 | 무 | 유 |
| 7 | 2003.2 | 초기 성장 | 석유탐사 자료처리 SW | 학생 | 유 | 유 |
| 8 | 2003.1 | 초기 성장 | 이미지 센서 | 일반 | 유 | 유 |
| 9 | 2002.12 | 초기 성장 | 반도체 부품 | 일반 | 무 | 유 |
| 10 | 2002.1 | 초기 성장 | 보안 소프트웨어 | 일반 | 무 | 유 |
| 11 | 2001.7 | 초기 성장 | 서버 스토리지 | 학생 | 유 | 무 |
| 12 | 2000.12 | 초기 성장 | TFT-array | 교수 | 유 | 유 |
| 13 | 2000.7 | 발전 회수 | 자동주문처리 시스템 | 일반 | 무 | 유 |
| 14 | 2000.7 | 발전 회수 | 시스템, 네트웍 장비 | 일반 | - | - |
| 15 | 2000.7 | 발전 회수 | 게임용 SW | 학생 | 유 | 무 |
| 16 | 2000.3 | 발전 회수 | 휴대폰 전자파 측정장치 | 교수 | 유 | 유 |
| 17 | 2000.2 | 발전 회수 | 정보가전 개발 | 일반 | 무 | 유 |
| 18 | 1999.12 | 발전 회수 | BSS(Billing Service System) | 일반 | 무 | 유 |
| 19 | 1999.1 | 발전 회수 | 휴대용 MP3 | 일반 | - | 유 |
| 20 | 1998.5 | 발전 회수 | 네비게이션 솔루션 | 일반 | - | - |
| 21 | 1998.4 | 발전 회수 | CAP(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) | 일반 | - | - |
| 22 | 1998.1 | 발전 회수 | 언어처리 자동번역기 | 학생 | 유 | 무 |
| 23 | 1997.8 | 발전 회수 | NMS(Network Management System) | 일반 | 무 | 유 |
| 24 | 1996.1 | 발전 회수 | 유전자 치료제, 신약 | 교수 | 유 | 유 |
| 25 | 1988.7 | 발전 회수 | TMS(환경측정기) | 일반 | - | - |

## 2. 애로요인 진단

□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요인들을 창업인력, 아이디어, 자원 등 경영요소별로 파악

**창업과정의 필요 요소**




### (1) 인력

□ 창업 초기에는 아이템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력 확보가 중요

- 핵심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창업 자체가 불가능

- 그러나 창업 초기의 실패 위험성,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움
  · 고급 기술인력의 풀(pool) 자체가 부족하고 창업이나 전직을 기피

**기업 면담 사례: 해외인력의 활용**

-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인건비 부담이 큰 국내 기술 인력 대신 베트남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함으로써 인력난을 해결
- 해외 인력의 경우 급여 대비 질적 우위를 기대할 수 있고 최소 2년 정도 프로젝트 기간 동안의 이직리스크가 국내 인력에 비해 적다고 판단
- 적정한 시점에 국내 인력을 투입하여 기술유출 등에 대한 안전장치는 갖출 계획
- 해외인력 활용을 통해 향후 해당국에 제품 수출 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기대

- 교수·연구원의 실험실 창업 지원과 휴·겸직 허용으로 양적 창업 실적은 증가
  ·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에 창업을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업적평가 방식으로 인한 불이익, 행정적 규제 등이 여전

**기업 면담 사례: 실험실 창업 질적 활성화 필요**

-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는 교수·연구원 창업 활성화 정책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세한 규모의 실험실 창업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
- 벤처버블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교육부와 대학 등은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으며 창업실적을 학교와 교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태도 견지
- 당시 B사는 실험실 창업을 위해 학내 보육센터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학교 측은 벤처확인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
  · 벤처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확인 요건을 심사하는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실적 미비를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
- 벤처 미확인으로 인한 사업 공간 확보 실패, 추가 비용 부담, 실적 부진이 악순환을 일으켜 사업화가 크게 지연

□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전문 경영인 및 경영지원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훨씬 증대

- 엔지니어 출신의 경우 경영 경험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약하기 쉬워서 경영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사업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
- 기획, 재무, 마케팅, 홍보 등 경영지원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가 곤란
  · 보유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기술개발 인력 확보를 우선

□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유인 제도가 미흡

- 자금력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유치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 스톡옵션제도의 실효성도 감소
  · 코스닥 시장 침체와 관련 규제의 강화로 스톡옵션의 수혜효과가 줄었음

**스톡옵션 관련 규제 강화**

- 스톡옵션 행사를 통한 시세 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
  · 이익 실현 시 최고 40%의 누진세율을 부과함에 따라 세후 소득 감소
  ·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5,000만원에서 3,000만원으로 축소
  · 일반 대기업 직원과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인력 유치 수단으로서 기능 미흡
- 스톡옵션 제공 시 비용처리 기준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
  ·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의 가치를 장부상 영업비용으로 처리
  · 이익 실현으로 수혜를 입은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직원 보상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고 인식

## (2) 경영 역량

□ 창업 초기단계에는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포착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애로요인

- 창업 인력이 창업 실무에 대한 지식, 비즈니스 마인드 등의 기초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음
  ·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, 경영자적 자질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

-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창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

· 사업 성공여부를 지나치게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움

□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데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좌초

-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

□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음

- 기술 지향적 마인드가 지나칠 경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성이 있는 제품보다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

- 후속 제품 개발에 착수한 경우에도 자금과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적기 시장 진입에 실패하기도 함

- 현금흐름 부족 등 자금운영 상의 위험에 직면

□ 창업기업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개척 및 사업기회 확보가 어려움

- 홍보 및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

- 해외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량 역시 부족

**기업 면담 사례: 판로 확대 어려움**

- 실험용 계측장치를 개발하는 C사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품질경쟁력이 있어도 인지도가 낮아 판로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
- C사는 공공기관의 슬러지 처리비용을 15%가량 절감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
- 품질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구매에 소극적이었으며 현장의 업무 담당자들은 장비 교체에 따른 업무증가를 이유로 구입을 기피
- 일부 기관은 장비 교체를 통한 비용 절감분의 일정부분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할 것을 약속하여 장비 구입을 설득

**기업 면담 사례: 해외 진출 필요자원 부족**

- 자원탐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D사는 해외 투자자의 제의로 창업
  ·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성과를 본 미국기업체가 먼저 사업화를 제의
- 국내에는 제품 수요가 없어 전적으로 해외 판매와 마케팅에 의존
  · 지인의 소개를 통한 미국 내 에이전시를 통해 위탁 판매와 사업 수주를 해결
- 판매와 마케팅을 위탁할 경우 신뢰할만한 현지 업체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며 창업초기 기업이 직접 하기에는 인력구조와 네트워크가 취약
  · 위탁 업체에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을 모두 의존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안이 별로 없음
- 사업 추진 분야의 국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매우 특수한 분야여서 정부 지원을 활용하려 해도 정책 담당자가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

## (3) 금융

□ 창업단계에서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기술의 시장성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이 취약

- 기술 수준과 사업성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전문 평가인력이 부족
  · 기술 영역이 보다 전문화·세분화되어짐에 따라 해당 분야의 경험과 분석력을 동시에 갖춘 심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움

- 피심사기업들은 기술 심사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와 프리젠테이션 기술 등의 외적 요인이 기술의 내재가치보다 중시된다고 인식

- 심사인력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CEO 역량, 시장 전망 등의 정성적 요인보다 재무제표, 매출실적 등 정량적 수치에 의존하기 쉬움
  · 불확실성이 높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보보다 수치화·계량화하기 쉬운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자금이 보수적으로 집행됨

- 자금 시장이 단기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

· 현재 투자시장은 기술의 신규성,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기보다 낮은 위험으로 단기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선호

**기업 면담 사례: 기술평가 시스템 미비**

- 바이오 벤처기업인 E사는 기술평가 전문 인력의 부재로 해당 분야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
- E사가 주력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은 일반적인 기술 창업에 비해서도 성공률이 극히 낮고 장기에 걸친 막대한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
- 창업 당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
· 국내 기업에서 관련 분야 하이테크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부재
- 국제학회 발표 등을 통해 해외에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
· 해외 투자자들의 평가와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지닌 국제 경쟁력을 확신
- 결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
· 일본, 미국 등의 경우 자금시장의 규모가 커서 장기간 수익을 확신할 수 없는 분야에도 투자가 가능
· 라이센스와 연구결과 공유 등을 통한 기술 접근성도 투자 수익의 일부로 인정하는 풍토가 존재

-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시장, 지분투자 방식의 금융이 미발달

**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시장 존재 여부**

| | 융자 시장 | | | 투자 시장 |
|---|---|---|---|---|
| | 신용 대출 | 보증부 대출 | 담보 대출 | 투자 |
| 창업 초기 | 미비 | 미비 | 비교적 발달 | 미비 |
| 성 장 기 | 미흡 | 발달 | 발달 | 미흡 |

자료: 재정경제부, “중소기업 금융 현황 및 대응방안”, 2004.7

**기업 면담 사례: 미래 성장성과 전략적 필요 과소평가**

- 전자부품 개발업체 F사는 신기술의 사업성을 현재 시장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
- F사는 자금지원을 위한 사업성 평가에서 개발 아이템의 시장규모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
  · 기술 개발을 통한 수입 제품의 대체 또는 경쟁 시장 조성을 통한 제품 가격 인하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와 미래 성장성이 과소평가
- F사가 개발 중인 방위산업 관련 기술은 기존 국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수요도 소량이라는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음
  · 방위산업 관련 제품의 특성 상 시장성보다는 국가 전략적 차원의 개발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

□ 전문성을 갖춘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부족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행해 온 융자위주의 보수적 자금 집행에 의존

- 벤처버블 붕괴 이후 벤처캐피탈 및 엔젤 투자자금과 함께 관련 전문 인력 또한 급속하게 시장을 이탈

**기업 면담 사례: 업종 특성 반영한 자금지원 필요**

-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G사는 자금지원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
  · 소프트웨어 업종은 대체로 제조업에 비해 적은 자금을 지원 받음
-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실험기자재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지출보다 개발 인력에게 지불되는 인건비가 자금 소요의 대부분
- 그러나 정책 자금의 경우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부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

□ 투자 자금의 회수 경로가 코스닥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대체 회수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

- 최근 코스닥 시장 침체로 자금 조달 및 회수 경로로서의 역할이 미흡

## (4) 창업환경 및 인프라

□ 벤처 붐 냉각 이후 분위기가 침체된 것이 기술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

- 선도 기술창업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
  ·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을 했던 기업들이 수익모델 부재와 자금 경색 등으로 고전
  ·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시장 여건이 악화

- 벤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 확산
  · 일부 벤처 기업의 주가조작, 불법 자금조달 등의 비윤리적· 편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신뢰가 저하
  · 코스닥 붕괴로 큰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벤처 정서가 여전

**기업 면담 사례: 벤처 버블 붕괴가 창업의 기회**

- 2003년 기업을 설립한 H사 대표는 창업 당시 경기침체와 벤처열기 냉각으로 주위의 우려에 직면
- 그러나 경기침체와 벤처 붐의 냉각이 오히려 진정한 벤처 정신을 가진 기업에게는 창업에 적기라고 지적
  · 벤처붐이 가라앉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보다 나은 경쟁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
  · 창업 아이템과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가능
- 벤처붐이 일 당시 풍부한 자금과 우호적인 기업환경에서 시작한 기업 중 그것에 안주한 다수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도태
  ·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기업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봄

□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미비

- 초중고 경제교육 과정에서 창업 관련 교육이 소홀하고 대학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극적

□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용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함

- 분사형(spin-off) 창업의 비활성화, 퇴직에 대한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창업에 따른 기회비용과 위험 부담이 큼

**기업 면담 사례: 분사형 창업 활성화 필요**

- 전자관련 대기업에 근무했던 I사 대표는 대기업 분사(spin-off)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업과정의 위험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
- 당사 대표는 업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던 중 개인적 관심분야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창업
- 이전 직장에서 분사(spin-off) 창업을 허용했다면 퇴직하지 않았을 것이며 비슷한 동기를 가진 이들의 창업이 보다 활발해졌을 것이라고 지적

· 창업 의욕과 아이템이 있어도 위험부담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

· 본인은 경력관리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창업 준비와 동시에 박사과정에 등록

□ 사업 실패 시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경감해주고 회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미작동

- 현재는 기업 파산 시 기업주에게 과도한 재무적 변제책임을 부여

· 채권자 보호 위주의 파산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장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음

- 실패한 기업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인색

· 부도 기업에 대해 금융·사업 제재를 일괄적으로 가함으로써 회생기회를 봉쇄하며 채권자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재

□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사업 공간 제공에 편중되어 소프트웨어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홀

- 부동산 임대료가 일반적인 사업공간에 비해 저렴하지만 공간 활용 및 할당과 관련된 운영체계가 경직적

- 창업전문교육, 경영·법률·세무 서비스 지원, 절차 및 행정 지원 등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이 미흡

**기업 면담 사례: 창업보육센터 입주 유인 감소**

- 반도체 설계업체인 J사는 사업 공간 임대 기능만으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
- J사는 공간 활용의 유연성과 지원 서비스 이용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근 본사를 대학창업보육센터에서 테헤란 밸리로 이전
  · 공간 확보, 구조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제가 획일적이고 전기· 네트웍 등의 인프라 관련 보수·관리 업무처리도 늦음
- 최근 테헤란 밸리의 부동산비용 하락으로 창업보육센터와의 임대료 차이가 줄어든 것도 큰 이유

□ 기술의 제품화 단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생산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함

- 제품 상용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자체 공장설립의 위험 부담이 큼
  · 자체설립에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 이용이 가능한 생산설비는 한정되어 있어 기술개발 과정에 제약이 됨

- 외주업체의 제조능력과 제품의 질적 수준도 불만족스러움

**기업 면담 사례: 공동 생산시설 확충 절실**

- 반도체 개발업체 K사의 경우 샘플 제조에만 2~3억이 소요되는 고가 전자부품을 생산
  · 설계한 반도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공장은 국내 1곳뿐이며 자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라인 하나에만 1조원이 소요
- 제조 비용과 공장이용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실험을 할 수 없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해외 공장 활용을 검토
- 대만의 경우 중소규모 기업 차원의 투자와 설립이 어려운 성격의 공장은 국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## (5) 제도 및 행정절차

□ 창업 단계에서 각종 절차와 규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진입장벽이 됨

- 기업 및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규제가 다소 복잡
  · 인·허가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서류작성의 어려움, 고가의 부동산 비용과 규제 등으로 인해 입지선정이 어렵고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

**창업관련 절차 및 규제 현황**

- 2004년 3~4월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창업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중소형 공장 1개를 짓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규제는 다음과 같음
· 인·허가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: 1억 5천만원(농지 1만㎡ 전용 시)
·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: 180일
· 창업관련 규제: 68건 (입지 30건, 사업계획승인 21건, 공장건축·등록 13건, 부담금 4건)
-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최근 정부는 현행 '중소기업창업지원법' 개정을 추진
· 공장설립을 위한 일괄의제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
· 일괄의제처리 대상 인·허가 사항을 현행 48개에서 65개로 확대
· 정식 공장설립 신청 전 공장설립 가능성을 심사하는 사전협의제도 도입

- 주식회사 요건 구비와 자본금 충족 등에서 어려움이 있음
  ·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창업의 경우 회사 형태나 자본금 요건 등이 중요 변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시 부담으로 작용

□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허가 규제 또한 유·무형의 비용을 초래

- 제품 인허가 기관의 전문 평가능력 부재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거나 동일 제품과 기술에 대한 부처 간 중복 규제와 이견으로 사업화가 지연

# Ⅳ. 선진국의 기술창업 지원정책

## 1. 미국

□ 미 중소기업청(SBA)의 창업지원정책은 직접적 방식이 아닌, 민간투자자, 대학 등으로 하여금 창업 지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특징

- 정부의 직접적인 창업 지원보다는 Angel, VC 등의 민간 투자자 및 대학들로 하여금 창업을 지원하도록 적극 유인하는 시스템

- 이러한 정책적 framework 하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, 융자, 정보 및 각종 서비스 제공, 세금 감면 등의 간접적 지원에 주력

□ 미 전역에 있는 '중소기업육성센터(SBDC: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)'를 통해 원스톱 창업을 지원

- SBA는 주 정부, 세부 지자체, 민간기업, 상공회의소, 대학 등과 협력하여 창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SBDC를 활용

- 대학 내에 SBDC를 설치하고 교수들이 스탭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음

- SBDC는 퇴역경영지도자제도(SCORE: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)와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
  · 이들은 기업경영에 대한 많은 경험과 실적을 가진 전문가 조직으로,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활발히 나서고 있음
  · 자금조달, 정부조달 참가, 세무신고 등 신청서·계약서 작성, 관계기관 소개 등 개별 중소기업의 많은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

□ 미국의 창업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벤처 캐피털(VC)로 대표되는 민간 시스템

- 미국의 VC들은 단순한 자금 투자에 그치지 않고 각종 경영지도 활동을 병행
  · 미국은 독립 VC이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, 창업 지원 관련 전문성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

- VC는 파트너십 제도에 의해 펀드를 결성함으로써 폭넓은 자금 조달이 가능

- 미국의 VC는 층이 두터운 것은 물론 창업초기 단계에 투자를 특화하는 VC도 있는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
  · 미국에서 VC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활력 있는 장외공개시장 및 기업의 M&A 활동에 기인하는 바가 큼

□ VC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SBA가 시행하는 「중소기업투자회사(SBIC: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)」 프로그램

- 1958년 설립된 SBIC는 민간이 운영하는 SBIC가 자본의 1/2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SBA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및 세금 감면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

- SBA는 사업계획안, 과거 실적 및 미래 전망 등을 바탕으로, 건실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SBIC이 있으면 인가를 내 줌
  · SBIC는 1년에 1회 SBA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 SBA에 대해 갖는 유일한 의무[23)]

- SBIC는 민간 VC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투자를 하며, 기본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
  · VC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경영통제권을 행사하고 SBIC보다 투자 규모가 큼

- SBIC는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금의 3배까지 보증

23) 지용희, “창업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창업활성화 방안”, 서강경영논총, 1998, p.487.

· 이들 제도가 실리콘 밸리 기업들의 자금원 역할을 담당

※ SBA는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장려를 위해, Angel과 창업자들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ACE-NET(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)을 구축

□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「SBIR(Small Business Research)」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

- SBIR 프로그램은 1982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혁신연구법에 근거

- 1억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기관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배분할 것을 의무화

- SBIR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의 기술력 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

-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, 일본 등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추출하여 원용하기 시작

**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프로그램(SBIR)**

| | | |
|---|---|---|
| 의미 | - 연방기관이 연구개발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배분토록 의무화<br>· 1억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갖고 있는 연방기관들이 예산의 2.5%를 중소기업에 배분 | |
| 단계별 screening 및 지원방식 | 1단계 | -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6개월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 |
| | 2단계 | - 1단계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상업화 잠재력 제고를 목적으로 2년간 최고 75만 달러까지 지원 |
| | 3단계 | - 제품 상업화가 목적이며,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해야 함 |

자료: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□ 창업지원 자금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

- 「LowDoc」이라는 독특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
  · 미 중소기업청(SBA)의 보증을 받도록 하는 신용 안에 총액 15만 달러(10만 달러에서 상향 조정) 이하는 '1장'의 특별한 신청서류를 사용
  · 이는 소액 신용의 응모·심사 절차를 간소화·신속화하여, 폭넓게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

## 2. 일본

□ 일본은 1999년, 36년 만에 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「창업 촉진」을 법률상으로 명기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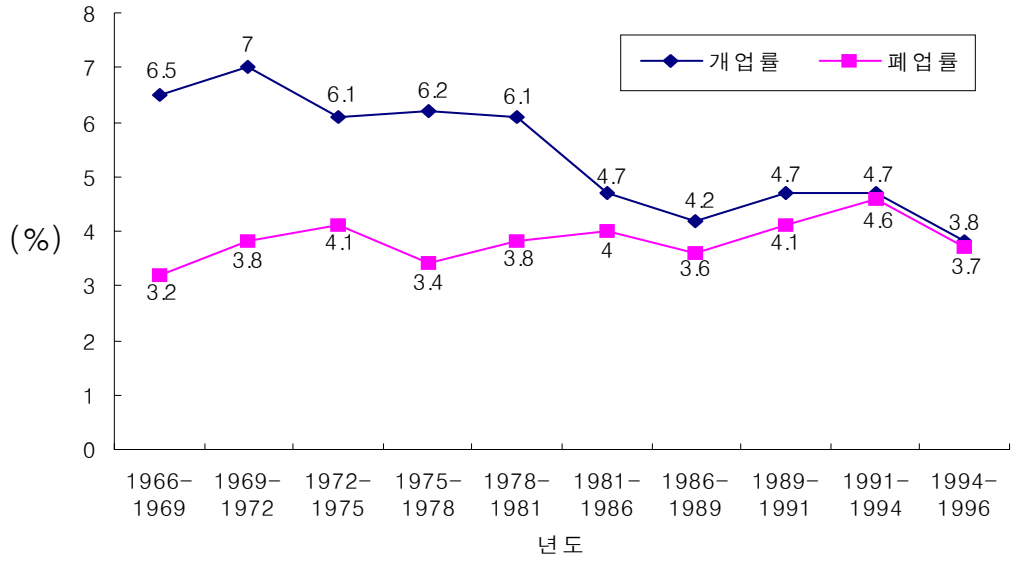
-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은 1963년, '대기업과의 격차 시정'을 정책목표로 두고 제정된 이래, 소위 '이중구조의 완화'에 크게 기여

- 그러나,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과는 별도로, '개업률의 저하'가 지속되면서 신규창업 촉진에 대한 사회·경제적 요청이 제기되기 시작
  · 개업률이 1960-70년대의 7%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3%대로 급락하면서 폐업률과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역전

- 1999년 개정된 신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「경제활력의 원천」으로 규정하고 「창업의 촉진」을 명기하여, 경제활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게끔 지원·사업환경의 정비를 제도적으로 추진

- 한편,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'긴급피난적 조치'를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

**일본의 開 · 廢業率 추이(非1차산업, 연평균)**




주1: 개업률 = (금번조사 시점의 사업자 수-전회조사 시점의 사업자 수)/전회 조사 시점의 사업자 수/年數(%)

주2: 폐업률 = 개업률-증가율

자료: 中小企業廳 編, 新中小企業基本法, 同友館, 2000, p. 5

□ 일본은 '경영혁신 및 창업 촉진'을 새 중소기업정책의 3대 축의 하나로 설정할 정도로 창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

- 새 중소기업정책의 3대 축은 「① 경영혁신 및 창업 촉진 ② 경영기반 강화 ③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의 원활한 적응」으로 요약될 수 있음

- '창업 촉진'을 '경영혁신' 및 '창조적 사업활동'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
  · 특히 '창업 촉진'과 관련하여, 「起業」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

-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뿐만 아니라, 새로운 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

□ 법적 정비에 뒤이어, 창업 지원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

- 2001년 10월, 일본정부는 5년 내에 창업기업 수를 매년 18만개에서 36만개로 배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

- 신규사업 창출을 독려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, '개혁추진포괄시행령'을 2002년 10월 제정하고 '중소기업도전지원법'을 2003년 1월 제정

□ 신규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

-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제도, 출자제도, 스톡옵션제도 등을 통해 자금 지원

- 다만, 미국과 같이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Angel, VC들은 매우 적은 편

-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, 정부계 금융기관인 중소기업투자육성회사가 창업초기의 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

- 정부계금융기관의 융자제도, 각종 신용보증제도 외에도, '起業挑戰支援무담보무보증대출제도' 등과 같은 새로운 자금지원 제도를 실시

□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정부가 지원

- 대학, 공설시험연구기관,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제휴를 지원하거나, 지식, 기술 등의 보급을 지원
  · 특히, 지자체의 공설시험연구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및 중소기업용 기술개발 관련 각종 보조금 교부 등이 활발

□ 창업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의 정보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각종 연수 및 지원 실시

- 중소기업사업단의 벤처 플라자 사업을 통해, 투자가, 판로제공 파트너, 필요인력 등과 연결되거나 공급 받음

- 각종 창업 세미나 외에도, '創業塾', 기업 OB인재를 활용한 중소·벤처기업 지원 시책을 실시
  · '創業塾'이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연수를 의미

□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창업 지원에 적극적

- 창업자에 대한 저리자금 융자 및 지급보증, 벤처재단 및 VC에 대한 자금지원,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실시

- 1999년 개정된 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, 향후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
  · '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 대등한 역할 분담을 요구받게 되며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을 시행한다'는 취지의 규정을 새로이 설치

## 3. 이스라엘

□ 이스라엘은 첨단 분야 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성화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정평

- 정부의 지원시책에 힘입어 IT, 전자, 바이오, 신소재,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다수 보유
  · 전체 지원업무는 산업무역부 내의 수석과학관실이 총괄

-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만든 「요즈마 펀드」가 혁신적 중소·벤처기업을 부흥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

## 요즈마 펀드(YOZMA Fund)

- 취약한 민간자본으로 고전하던 중소·벤처기업들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1억 불 규모로 만든 펀드
  · '요즈마'란 '시작(initiative)'을 뜻하는 이스라엘 어

- 이 펀드가 조성되자 이스라엘 기업들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던 외국자본이 급속히 참여하기 시작

- 기반이 잡힌 후 이스라엘 정부는 1997년 이 펀드의 경영권을 민간기업에 양도

- 요즈마 펀드에 힘입어 현재 이스라엘에는 50여 개의 벤처캐피탈이 활동 중
  · 이들은 자금제공 뿐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시

□ 이스라엘의 창업정책은 '기술 인큐베이터(TBI: Technological Business Incubator)'의 출범·가동이 기폭제로 작용

- 1991년, 광범위한 기술개발로 경제적 돌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수석 과학관실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TBI
  · 이는 1990년대 초 대거 입국한 舊소련 출신 유태인 과학자 지원이라는 목적도 있었음

- TBI는 국가로부터 창업자의 R&D 프로젝트 수행 지원 권한을 위임받은 비영리 독립법인으로, 개별 R&D 프로젝트는 독립유한책임회사로 운영
  · 개별 프로젝트는 TBI 안팎의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것이지만 수행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

- TBI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15만 달러(US$)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5%까지 무이자 융자를 제공
  · 프로젝트 성공시 매년 매출의 3%씩 원금 상환 때까지 갚도록 하는 반면, 실패시 상환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

-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,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개발·생산·마케팅까지 전개할 수 있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에 커다란 밑거름으로 작용

※ Incubator for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Kiryat Weizmann Ltd.
⇒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TBI로,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와 관계를 맺어 대학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기술개발

□ 그 외에, 다양한 형태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

- 1984년 「산업연구개발진흥법」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

- 포괄적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컨소시움 지원시책인 마그넷 프로그램을 운영

**마그넷(Magnet) 프로그램**

| |
|---|
| - 포괄적 첨단기술을 다수기업이 참가하는 산학 컨소시움을 통해 개발토록 지원<br>· 복수 기업 및 대학이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<br><br>- 유망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컨소시움 예산 총액의 65%까지 사용 |

자료: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세미나 자료(“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”, 2000. 9) 중 '이스라엘의 중소·벤처기업정책'에서 발췌 정리

- 「Green House」 프로그램을 통해, 창업에 나서는 기업에 2년간 총 30만불의 자금을 지원

**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한 창업 촉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**

□ 전세계 유태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창업기업과 선진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

- 해외 유태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
  · 미국 실리콘 밸리의 동향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중소·벤처기업에게 공급

- 철저히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미국시장을 겨냥하며, 창업기업의 funding도 나스닥 진출 가능성 여부에 의해 좌우
  · 미국 나스닥 등록기업 국가 순위: 1위(미국), 2위(캐나다), 3위(이스라엘)
  · 세계 위성통신장비 시장의 40%를 점하고 있는 Gilat Satellite Network, 컴퓨터 보안업체인 Check Point 등 많은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

- 고급 기술인력 활용을 위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설치한 연구개발 센터를 적극 활용
  · "Microsoft 최고의 자산은 이스라엘의 R&D센터"(빌 게이츠)

- 이러한 제반 노력의 결실로,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중소기업들에는 전세계로부터 자금이 쇄도
  · 미국의 정보통신 전문지 Red Herring은 "이스라엘은 '젖과 꿀이 흐르는 땅(Land of milk and honey)'이 아닌 '젖과 돈(money)이 흐르는 땅'이다"라고 격찬

## 4. 싱가포르

□ 싱가포르는 국가과학기술청(NSTB), 경제개발청(EDB) 등의 주도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

- 국가과학기술청의 「Technopreneurship 21」, 경제개발청이 이끄는 '벤처 캐피털 프로그램' 등이 그 대표적인 예

- 싱가포르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, 핀란드 등이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자극

- 창업 기업들의 첨단기술 및 이에 바탕을 둔 제품들이 싱가포르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차등적으로 지원

□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과 관련이 깊은 「Technopreneurship 21」는 1999년, 교육, 설비, 규제, 금융 등 4개 부문에 걸친 지원시책으로 구성[24)]

- 우선, '교육'을 모든 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, 국민들에게 기업가 정신, 혁신, 모험정신 등의 concept을 교육하는 데 주력
  · 이러한 교육제도는 사업가가 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영, 금융, 세무 등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도록 학과를 개편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

- 설비와 관련, 고급두뇌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「Singapore One」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99.9%의 가구에 초고속통신망을 공급하여 지식기반 인프라를 구축
  · 미 실리콘 밸리를 모방, 벤처기업, 금융, 연구소, VC 및 쾌적한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벤처단지를 조성
  · 과학단지(Science Park Ⅰ, Ⅱ) 내에 '혁신센터'와 '기술보육 프로그램'도 설립·운영

- 규제완화 노력도 활발하여, 1999년 이후 'Technopreneur Investment Incentive Scheme'을 도입하여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 및 등록 등에 세제 감면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
  ·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기 위해 '파산관련 절차 및 법률(Bankruptcy procedures and laws)'을 정비하여 화해절차 등을 활성화한 것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
  · 가정을 소규모 창업공간으로 활용가능하게 한 THO(Technopreneur Home Office), 외국인의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(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2년간 체류 가능) 등도 규제완화 노력의 가시적 사례

24) http://www.actetsme.org/sing 등을 바탕으로 정리

- 금융 부문에서는 'TIF(Technopreneurship Investment Fund)'를 조성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금융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
  · 그 결과, 2001년 현재 싱가포르의 VC 규모는 100억 싱가포르 달러(S$)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

□ 싱가포르는 자국의 국가적 특성에 맞춰, 능력 있는 중소·벤처기업들이 연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점

- 예컨대,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라이센싱 제도를 장려하고 있는데, 기술자가 기술개발 시 소속기관과 6:4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보장

# Ⅴ. 정책제언

## 1. 기술창업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제고

□ 창업 및 벤처 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

-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음

- 현재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·보육·교육·투자 등 관련 지원제도의 상호 연계체제와 이들 부문의 지원기관 간 업무협의 및 교류가 미흡한 상황

- 따라서, 유관기관과 지원 인프라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이 시급

- 유망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집중 지원

□ 기술개발과 창업에 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창업관련 정책 부서의 기능을 확충

- 창업 초기에는 기술개발 관련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간접 인프라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

-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한 부처별 정책조정 기구 설치

## 2. 자생력 있는 창업기업들의 생존 토양을 조성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

□ 정책당국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는 기존의 폐단을 불식시키겠다는 ‘시그널’을 발신

- 자생력을 갖춘 기업, 벤처정신이 살아있는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, 시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인

□ 기업출신 전문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

- 분사(spin-off)된 인력이나 퇴출된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을 적극 장려
  ·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 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부여
  · 벤처타운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우선권 부여

**마쓰시타 전기의 분사 창업 육성제도**

- 마쓰시타 전기는 2000년 말 사내 창업가를 지원하는 '파나소닉 스핀업 펀드(PSUF)' 제도 시행
① 창업 지원을 위한 100억 엔의 펀드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모집
②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제 창업까지 반년 이상 준비하는 체제 도입
③ 창업 성공시 사내 창업가에 대한 후한 보상
④ '세이프티 넷' 이라는 신분 보장 제도를 운영, 창업 시 사원신분을 유지하거나 퇴직 후 사업 성패에 따라 정사원 복귀 인정

□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라이센싱 제도를 장려

- 창업 과정에서 기술자가 기술개발 시 기업과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

□ 기업, 언론과 사회가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동참

- 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

**영국 쉘(Shell)사의 LiveWIRE(영국)**

- 쉘은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LiveWIRE 프로그램을 실시
- 16~30세의 청년들에게 창업준비와 기업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타당성 검토, 정보제공, 상담/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영국 전체에 100개 정도의 지역네트워크 구축
- 1982년 시작된 이래 약 50만 명의 청년들이 활용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성공 및 생존율은 평균의 2배 수준

자료: 중소기업청, 『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』, 2003.11

□ 창업교육의 강사, 내용 및 시설을 전문화, 내실화

- 현재 개설되고 있는 강좌들은 대부분이 일반 강좌로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

- 미국, 영국, 일본 등 선진국의 창업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

□ 대학(원)생 등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

- 창업교육 경비 지원,학점 인정 등으로 과정 이수를 유도

- 창업·기업가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 과정 설치를 적극 권장
  · 일본 긴키(近畿)대 '모노즈쿠리(物づくり)대학원'은 학생들에게 논문으로 학위 심사를 하지 않고,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신상품을 개발해야 공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

- 창업과 직결되는 현장 학습을 충실하게 교육
  · 한국기술교육대(충남 소재)는 독특한 학사관리(엄격한 졸업학점, 학생 전원에 실험실습 의무 부과 등), 현장 니-즈에 맞는 '최신 버전'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진 등으로 지역사회 및 기업에서 극찬

## 3.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

□ 기업파산 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기의 기회를 지원

- 불법 및 악의가 아닌 부도의 경우 기업가가 회생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
  · 기업 부도 시 당좌거래 정지, 적색거래처 등록, 여신 규제 등 금융·사업을 일괄적으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편

- '파산관련 절차 및 법률'을 정비하여 화해절차 등을 활성화
  · 파산기업의 경영자가 채권자의 승인 하에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'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제도(debtor-in-possession system)'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

□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

- 부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두려움 및 리스크가 크고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, 창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

-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DB화하여 기업과 정책 당국이 활용

- 부도기업인의 실패 및 재기경험을 전파하여 신규창업 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활용
  · 부도기업인이 기술창업 컨설턴트, 창업보육기관 운영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실패 및 재기경험을 공유

## 4.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혁신

□ 창업 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자금지원, 평가 시스템을 구축

- 창업초기 기업은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, 그래야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 가능

- 초기에는 R&D에 자본금이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남게 되는데,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재무제표에 의한 '기계적인 평가'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현실

- 미래지향적 요소에 의한 금융평가 시스템의 조속한 확립을 통해, 기술혁신형 유망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인

□ 정책금융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

- 중복지원의 시정, 지원예산의 사전조정 기능 및 사후평가 기능 제고

- 자금 지원의 '일몰제(sunset)' 도입을 확대

□ 현행 KOSBIR을 발전적으로 보완

-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예산 배분을 '권장사항'에서 '의무사항'으로 전환

□ 기업은행과 신보, 기보 등을 총괄·감독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원스톱 지원

- 정부가 지주회사 형태인 '중소기업 지원 은행 그룹'을 설립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은행과 보증회사들을 자회사로 설치

- 지주회사인 '중소기업 지원 은행 그룹'은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 감독하고, 중소기업은행과 보증회사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출과 보증을 시행
  · 중소기업은행은 민간은행이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 공동투자자(Co-financer)로 참여
  ·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은 민간은행에 위탁해 심사하고,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직접 실시

※ 프랑스가 이러한 형태의 중소기업 전문 지원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, 특히 고용 창출을 위한 창업형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특징
  * 실제로 프랑스에서 지난 2002년 중 보증회사가 보증한 기업 가운데 52%(약 2만 6,300여개)가 창업기업으로 조사

□ 중소·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질적·양적으로 대폭 확대

- 창업난 해결을 위해 조성하는 사모 펀드의 경우, 불법·부당한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, 건전성 감독 기준을 만들면서 사모 펀드를 육성

-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
  · 최근의 경기침체 현상을 반영, 금리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금융기관들은 예금금리와는 달리 대출금리 인하에 인색
  · 대출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되, 예금금리 인하 폭에 맞춰 대출금리 자체를 대폭 인하

- 금융기관 내에서 경륜 있고 우수한 인력을 창업지원 자금 심사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, Relationship Manager 양성에 주력
  · 자금심사의 업무 성격상 위험기피적 입장이 되기 쉬운 것이 현실
  · 이러한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여, 심사인력의 재량권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경주

- '창업 지원'에 필요한 자금을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 이상으로 대폭 확대

□ 창업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털 등 금융투자회사의 역량을 차별화

- 창업관련 자금 지원은 물론 효율적인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'창업지원 전문 벤처 캐피털'을 적극 양성
  · 미국의 경우 벤처 캐피털이 목적별로 특화되어 있고 종류도 매우 다양

-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들(엔젤)의 투자 장려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
  · 현재 난립되어 있는 창업관련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통합하고, 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

□ 대기업의 유망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적극 검토

- 공정거래법상의 관련조항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
  ·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원료·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30%미만 출자 시 5년간 예외를 인정
  · 혁신 기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, 예외 인정 범위와 기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

## 5. 경영역량 확충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

□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전략 지원 시스템 구축

- 기술개발은 가급적 판매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력

- 사전(事前) 컨설팅 개념으로, 기술개발 전에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조달, 생산 및 판매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끔 지원

- 창업부터 생산,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예측가능성을 갖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

□ 창업기업의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

- 창업기업 지원 관련 서비스마다 독립된 기관을 유지하되, 이들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끔 「Business Link」를 형성·운영
  · 예컨대, 경영컨설팅과 기술 지원은 상호 독립된 기관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

- 이를 바탕으로, 창업기업이 한 곳을 접촉하면 타 서비스에 모두 연계가 되는 '원스톱 지원 시스템'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

□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「기술개발·생산·마케팅(T-P-M)」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'차등 지속지원 시스템'을 구축

-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들의 성장 가도에 있어 최대장벽은 '마케팅'

- 이들 기업에게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'수요견인 전략(Demand Pull Strategy)'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
  · 이는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reference를 제공함과 동시에, 이들의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수행

- 대규모 고정투자가 소요되는 국제 마케팅이 필요할 경우,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컨소시움 구성을 지원

□ 객관적인 인증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 조성

- 구매 담당자들은 책임 문제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제품은 되도록 사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할 수 밖에 없음

- 대기업 측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전향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

□ 글로벌 마켓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 하에 개발토록 지원

- 복수의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

- 이에 참여하는 기업, 대학 등에 일정 비율의 자금 지원을 시행

- 기술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mentoring 제도를 도입
  · 기업과 학과(혹은 담당교수) 간에 1 對 1 매치 및 지원

□ R&D예산 시행 주체인 정부와 수혜자인 기업 상호간에 호순환적 자극을 주는 '인센티브型 기술혁신 프로그램'을 개발

- 개별 창업기업 지원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, 프로젝트 성공 시 정부가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징수
  · 실패 시 상환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

- 이를 BI의 효율적 운영과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

□ 아웃소싱 활성화를 적극 지원

- 초기 창업단계 기업은 생산비용에 비해 마진이 적으므로, 핵심사업 이외 부분의 아웃소싱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
  · 업종별·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

- 부동산, 시설장비 등에 대한 리스를 활성화하고, 동 업종의 공동 생산시설 구축이 가능할 경우 적극 지원

□ 유망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인력 배정 확대 및 겸직·휴직 인정제도 존속

- 제조인력, 전문사무직(금융 직종 등)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

- 교수, 연구원 등에 대한 겸직 및 휴직 인정을 계속 유지

□ 파견근로자 문제, 주5일제 근무제 확산, 외국인 채용 등과 관련하여 폭넓게 예외를 인정

- 각종 의무비율, 분담금 부담 등에 있어 차등 적용

-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기술 인력의 생활기반을 마련
  ·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중 어떤 루트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조기에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충분히 감안

□ 중소·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시 인건비 부분 허용

-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 우려는 있으나, 일단 허용한 후 수시 실사 등을 통해 보완

## 6. 창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

□ 창업지원 자금 규모에 따라 지원절차를 차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창업관련 절차를 대폭 축소

-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
  · 미국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을 받게 하는 신용 안에 총액 15만 달러 이하는 '1장'의 특별한 신청서류를 사용가능토록 조치(「LowDoc 프로그램」)

- 네덜란드처럼 아예 창업허가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

□ 창업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
-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
  ·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벤처확인기업에 적용되는 2000만원 자본금 제도를 유지하고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자본요건을 인하
  · 우리나라의 최소자본요건은 1인당 국민소득을 상회하는 반면 OECD 국가들 대부분은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이하 수준

□ 창업관련 정보 시스템을 재정비

- 부처별 지원시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

- 사업자 편의를 감안한 창업관련 정보 제공

· 과거의 자료는 물론, 제·개정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한 곳에 모아두거나, 관련부처 혹은 부서간 정보를 연계하여 링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도 및 연계 검색도를 제고

- 기업에 대한 콜 센터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
· 무엇이, 어떻게, 누구에게 지원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게끔 정보접근 단계를 세분화 · filtering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
□ 유연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

- 소규모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
· 싱가포르는 1999년부터 가정을 소규모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'THO(Technopreneur Home Office)' 제도를 만들어 지원

- 창업기업의 외부 차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
· 독일은 기업가 개인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면서, 이를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계상하게끔 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외부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'자기자본 보조 프로그램'을 실시

## 7. 창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조성

□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정부 및 지자체가 적극 지원

- 정부,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「起業」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홍보

- 지방의 기술 창업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 추진
· 중앙부처, 민간기업 등이 전문 인력을 지방에 파견

- 창업보육센터(BI)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

· 최근 BI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, BI 보육실을 창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육실 임대율이 일정기준에 미달 시 취소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

□ 지역별 벤처 클러스터의 특화 육성

- 지역별 벤처 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명확화
· 가능성이 있는 벤처 클러스터를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

- 대학 및 연구소 주도, 대기업 주도, 지역특화형, 실리콘 밸리형 등으로 발전 전략을 차별화하여 육성

**포항 테크노 파크**

- 포항 테크노파크는 2000년 포항시와 포스코, 포항공대가 주도하여 형성
· 정부가 아닌 지역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벤처단지를 형성한 첫 사례
· 철강중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의 이전을 시도
-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포스코, 세계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한 포항공대, 산업과학연구원(RIST), 지역벤처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 산·학·연 협력 모델을 제시
· 2003년 말 기준 연구 인력들이 취득한 특허는 1,325건으로 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거나 연구 성과를 기업에 이전

자료: “지방이 경쟁력이다”, 『중앙일보』, 2004.9.9

<참고문헌>

김종년 등,“기업가정신의 약화와 복원방안”, 삼성경제연구소, 2004.6
권남훈·오정숙, “2003 IT산업 경쟁력 국제비교: OECD국가를 중심으로”, KISDI, 2003
남영호·김완민, “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가능성 분석-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”, 벤처경영연구 창간호, 1998
박윤재·윤현덕·김영수, “한국의 창업여건과 활성화에 관한 국제비교연구-GEM 연구를 중심으로”, 중소기업연구, 2001.9
박용일, “벤처기업의 창업과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”,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4호, 2000
배종태, “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과 한국기업에게 주는 시사점”, KAIST, 2004
성소미, “한국의 벤처: 평가와 발전전략”, 한국개발연구원, 2001
이상석, “중소기업 창업결정요인”, 한국중소기업회지 제20권 제1호, 1998
지용희, “창업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창업활성화 방안”, 서강경영논총, 1998
최동규, “도시형 중소기업의 창업지원대책-벤처기업 창업활성화방안”, 1997
한정화, “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방안”, 경상논총, 1993
존 L.네샤임,『벤처 창사 A to Z』(서울 : 한경 PC라인, 2000),
재정경제부, "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", 2004.7
재정경제부, “중소기업 금융 현황 및 대응방안”, 2004.7
통계청,『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』,각 년도
한국은행, 『어음 부도율 동향』, 각월 (전국 8대 도시 기준)
중소기업청, 『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』, 각 년도
중소기업청, 『벤처기업 현황』, 각월
중소기업청,『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』, 2003.11
중소기업특별위원회,“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”, 2000. 9
『중소기업창업지원법·시행령·시행규칙』
中小企業廳 編, 新中小企業基本法, 同友館, 2000

http://stat.smba.go.kr/ (중소기업청,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)
http://www.kosdaq.com/ (코스닥증권시장 홈페이지)
http://www.kse.or.kr/ (증권거래소 홈페이지)
http://www.digitalsme.com/ (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보은행 홈페이지)
http://www.venturenet.or.kr/ (벤처넷 홈페이지)
http://www.venturenet.or.kr/ (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)
http://www.sbc.or.kr/ (중소기업진흥공단)
http://www.changupnet.go.kr/ (창업넷 홈페이지)
http://www.kova.or.kr/ (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)
http://www.kvca.or.kr/ (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)
http://www.actetsme.org/ (APEC Center for Technology Exchange and Training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)
GEM, 『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: Executive Report』, 각 년도
OECD, "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The OECD Countries", 2003
World Bank, 『Doing Business in 2005』, 2004